

월간

나라재정

FISCAL INFORMATION BULLETIN

07

2025 JULY

VOL. 103

소중한 내 일터, 골목길 구석구석,
소상공인과 민생 경제가 살아나도록



Theme Story

지역경제와 골목길 상권, 내 일터와 우리 이웃이 다 함께 행복한 내일을 위하여
지역과 골목길 구석구석에 재정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2288-6200 홈페이지 www.fis.kr 발행인 윤석호 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정보분석센터 | 02-6908-8652 기획·디자인·인쇄 ㈜디자인어백플러스 | 02-2672-1535



재정 INSIGHT	
04	통계로 보는 FIS 인사이트 민생회복을 위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0	이달의 재정 VOCA 통합재정수지 & 관리재정수지
12	재정칼럼 소비여력 확보와 경기활성화 재정운용방향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소상공인이 직면한 현실과 새 정부 소상공인 재정정책 방향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재정 NOW	
24	숫자로 보는 재정동향 2025년 5월 기준 재정동향
26	해외재정동향 주요국 및 국제기구 재정동향
36	재정 캘린더

재정 NAVIGATION	
38	예술사 속 재정경제 이야기 베네치아, 교역의 바다를 밝힌 빛의 예술
44	내가 써온 한국 재정사 지방자치제 30년과 재정분권
48	재정이 MONEY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사회와 소상공인에게 주어진 또다른 길
52	플랫폼이 된 도시 홍콩,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 정체성을 쌓아가다
60	서울 남산공원의 여섯 위인 백범 김구
62	이달의 재정경제 도서

FIS 재정	
64	FIS 재정 알리미 사이버 보안관계
66	재정원 소식
68	애독자 코너



통계로 보는

민생회복을 위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글·김명규 연구위원



정부는 5월 산불 재해·재난과 통상리스크, AI 생태계 혁신, 민생지원 등 현안에 대응하고자 13.8조 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럼에도 최근 경제성장률이 4분기 0% 내외에 머물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건설투자도 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서민과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는 경제지표의 어려움보다 더 큰데, 코로나19의 충격을 간신히 이겨낸 소상공인에게선 앞선 데 뒤틀린 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살피고 경제 선순환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대응하기로 하였다. 추경안 편성 배경에는 전술한 대로 경기·민생 안정에 중점 투자하여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는 데 있다. 주요 방안으로 첫째, 소비·투자 촉진, 건설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고, 둘째,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신속한 재기를 뒷받침하고, 고용 안전망 강화, 취약계층 지원으로 민생 회복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 19일 30.5조 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보다 1.3조 원 증가한 31.8조 원 규모로 7월 4일 확정되었다. 이번 추경은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집행 상황 재점검을 거쳐 일부 사업 추가 절감으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였다. 정부는 7월 5일 긴급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총 31.8조 원 중 20.7조 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9월 말까지 87.5%를 집행하여 적시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고 밝혔다.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전체 모습 |

(단위: 조 원)

구분	정부안	국회 확정	증감
합계	30.5	31.8	1.3
① 경기 진작	15.2	17.3	2.1
▶ 소비여력 보강	11.3	13.3	2.0
▶ 건설경기 활성화	2.7	2.7	0.02
▶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1.2	1.3	0.1
② 민생안정	5.0	5.3	0.3
▶ 소상공인 재기 지원	1.4	1.4	-
▶ 고용안전망 강화	1.6	1.6	-
▶ 취약계층 물가안정 지원	0.7	1.0	0.3
▶ 지방재정 보강 등	1.3	1.3	-
③ 세입 경정	10.3	10.3	-
▶ 금년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 지원	10.3		

주: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1.1조 원 감액 조정

자료: 기획재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

이번 추경안의 대표적인 사업은 경기진작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이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지원할 예정이다. 1차에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4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2차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1차 지급에서는 국회 협의 과정에서 제한한 바대로 지원 금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정책 효과를 높이도록 설계하였다. 차상위·한부모 가족에게는 1인당 30만 원, 기초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하며, 비수도권 거주자에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는 5만 원이 추가 지급한다. 2차에 걸쳐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1차 신청기간은 7.21.~9.12.이며, 2차는 9.22.~10.31.이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개요 |

구 분	지원금액			
	상위 10%	일반국민	차상위·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
1차 선지급 (비수도권지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5만 원 (+3만 원/+5만 원)	15만 원 (+3만 원/+5만 원)	30만 원 (+3만 원/+5만 원)	40만 원 (+3만 원/+5만 원)
2차추가선지급	-	+10만 원		
합계	15만 원 (18만 원/20만 원)	25만 원 (28만 원/30만 원)	40만 원 (43만 원/45만 원)	50만 원 (53만 원/55만 원)

1차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 우선 지급

차상위 30만 원, 기초 40만 원

- * 비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제외) 1인당 3만 원 추가 지원
-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은 1인당 5만 원 추가 지원

2차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소비쿠폰 신청방법은 카드사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등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제휴은행 영업점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거주지역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사용 시 연 매출 30억 이하 매장에서 쓸 수 있다.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소비쿠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할 예정이다.

2020년 코로나19 소득지원정책 사례와의 비교

우리는 5년 전 코로나19 기간 지원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기억한다. 당시 긴급재난지원금과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과의 공통점은 위축된 민간 소비를 독려한다는 점이다. 다른 점은, 2020년의 경우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5인 가구인 경우 최대 지원 금액은 4인 이상인 100만 원이었으나, 이번 지원 금액은 수도권 일반 국민 기준 125만 원으로 지원규모도 다르다.

코로나19 당시 가구 또는 개인에게 지원한 미국, 일본의 유사 정책을 소개한다. 우선 미국은 경제 충격급여라는 이름으로 3차례에 걸쳐 지원하였는데, 우리나라, 일본과 가장 큰 차이는 소득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은 75,000달러 이하에게, 가구는 부부합산 150,000달러 이하 소득자에게만 지급하였다. 차수별로 지원 금액도 차등을 두었다.

일본은 2020년 일본 특별정액급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였는데 개인별로 10만 엔을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과 유사하다. 최근 일본(6.10. 발표 기준)은 작년에 이은 물가 상승에 대한 국민 부담 완화 목적으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본 내 거주자 개인에게 2만 엔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세가 면제되는 저소득 가구에는 2만 엔을 추가로 받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기존 5만 엔 지급 계획에서 줄어든 금액이다.

| 코로나19 시기 주요국 개인(가구) 소득지원 정책 비교 |

구분	지원금명		지급 대상	지원 기준	지원 금액
한국	긴급 재난 지원금	1차	•모든 가구	•모든 국민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
		2차	•개인 (소상공인, 프리랜서, 미취업 청년) •가구 (저소득층)	•매출 감소 소상공인 •소득 감소 프리랜서, 저소득층 등	•소상공인: 100~200만 원 •특고, 프리랜서, 미취업 청년: 150만 원(1차 지원금 수급자 50만 원) •저소득층: 1차 지원금과 동일
미국	경제 충격 급여	1차	•모든 개인 (가구)	•연 소득 75,000달러 이하, 부부 합산 150,000달러 이하	•성인 1명당 1,200달러, •부부 2,400달러 •17세 이하 자녀당 500달러 추가
		2차			•성인 1명당 600달러 •부부 1,200달러 •17세 이하 자녀당 600달러 추가
		3차			•성인 1명당 1,400달러 •부부 2,800달러 지급 •부양가족 1명당 1,400달러 추가
일본	특별정액급부금 (’20년 4월)		•모든 개인	•모든 국민 (외국인 거주자 포함)	•개인당 10만 엔

자료 : 김명규(2024), "코로나19 소득지원 정책 사례분석", FIS 재정리포트 24-06.

소득지원 정책의 효과 분석 사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의 효과는 주변 소상공인 소비를 독려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 하는데 1차 효과가 있고, 소비가 생산활동 증가, 투자와 고용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 경기 활성화 연쇄효과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으로 인한 소비효과를 예상하기 위해, 기존 정책 연구사례를 검토해 소비 효과를 가늠해 본다. 아래는 우리나라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모아놓은 결과이다. 대부분 1차 지원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소비쿠폰 지원과 규모는 다르지만, 소비성향은 유사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소비효과를 참고할 수 있겠다.

재난지원금 소비 효과는 한계소비성향을 측정하는 방식이 가장 많았는데, 연구별로 차이는 있으나 0.292~0.782로 나타나 지원금 1만 원 증가 시 소비는 적게는 2,920원에서 많게는 7,820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0.015~0.47)과 일본(0.06~0.27) 연구결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비를 통해서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는 규칙에 따른 효과로 보인다(김명규, 2024).

재난지원금 소비 효과의 지속성은 지급 시점인 5월 이후 절감하다 7월 소진되었으며, 지원금 사용기간 동안 미래소비를 앞당겼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이러한 분석은 소상공인 업체에서 효과가 집중되었다고 보았는데, 대부분 사용가능 업체가 소규모이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여유진 외, 2021; 문경준·이창우·한용희, 2021).

이번 추정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규모를 1차 추정에서 4,000억 원에 이어 6,000억 원을 확대하였는데, 이는 약 29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매출 증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한 소비 효과와 상승효과(synergy)를 유발한다면, 정부의 목표인 경기 선순환을 통한 민생회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1차) 소비진작 효과 분석 사례 |

구분	분석 결과	분석 기간
김미루·오윤해 (2020)	•매출액 4.0조 원 증가, 투입재원 대비 26.2~36.1% 규모 •내구재와 필수재를 중심으로 소비 증가	2019.1 ~2020.8
남재현·이래혁 (2021)	•12분위 지출 각각 9.0%, 6.0% 증가 •품목별로는 교육지출 감소, 생필품 증가	2019.1 ~2020.9
문경준·이창우·한용희 (2021)	•지원금 사용기간 동안 소상공인 업체에서 소비를 앞당겨서 했고, 사용종료 이후에는 소비 감축	2019.1 ~2020.11

구분	분석 결과	분석 기간
박수경·강영준 (2022)	•제주지역 지원금의 소비 한계효과는 정부형과 제주형이 각각 0.014, 0.012	2020.1 ~2020.8
여유진 외(2021)	•소비진작효과는 5월 이후 점감하였고 7월 이후 효과 소진	2019.1 ~2020.8
이우진·강창희·우석진 (2021)	•한계소비성향 2~3분기 0.654~0.782	2019.1 ~2020.9
이승호·홍민기 (2021)	•코로나19로 2020년 상반기 소득은 4.4%, 지출은 8.1% 감소 •재난지원금으로 소비는 12.4% 증가 효과	2019.1 ~2020.6
홍민기 (2020)	•코로나19로 소비 16.3% 감소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으로 소비 10.4% 증가	2019.1 ~2020.9

자료 : 김명규(2024), 표 수정



참고자료

- 김명규(2024). “코로나19 소득지원 정책 사례분석,” FIS 재정리포트 24-06.
- 김미루·오윤해(2020).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KDI정책포럼』 제281호(2020-06).
- 남재현·이래혁(2021).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미치는 영향- 소득 계층별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48집 제1호, pp.63-95.
- 문경준·이창우·한용희(2021). “긴급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지원 효과 : 유통업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제34권 제8호(통권 202호) pp.1465-1490.
- 박수경·강영준(2022).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일별 소비 반응 분석 : 제주지역 카드지출액 자료를 이용,”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4(5), pp.1733-1744.
- 여유진 외(2021).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및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평가 연구(종합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37-01.
- 이승호·홍민기(2021). “코로나19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득과 지출에 미친 영향,” 『한국사회정책』 제28권 제3호, pp.17~44.
- 이우진·강창희·우석진(2022). “2020년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소득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미친 영향: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분석,” 『경제학연구』 제70집 제1호, pp.53-88.
- 홍민기(2020). “코로나19와 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노동리뷰』 12월호, pp.21-38.



이달의 재정 VOCA

통합재정수지 &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재정수지’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용돈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면 그게 ‘수입’입니다. 그 돈으로 음식을 사 먹거나 옷을 구매하면 ‘지출’이 됩니다.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남는 돈이 있을 수도 있고, 모자라서 빚을 질 수도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세금이나 다른 방법으로 얻은 돈을 ‘재정수입’, 도로를 만들거나 복지에 쓰는 돈을 ‘재정지출’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수입이 더 많으면 ‘흑자’, 지출이 더 많으면 ‘적자’라고 합니다. 이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재정수지’입니다.

통합재정수지란?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의 전체 수입과 전체 지출을 비교해서 계산합니다. 여기에는 일반회계(국가의 기본 예산), 특별회계(특정 목적을 위한 예산),

그리고 기금(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수입과 지출이 모두 포함됩니다. 즉,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총지출’로, 이 지표는 정부 전체의 재정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정부가 얼마나 돈을 벌고, 얼마나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계산법



주: 총 6개의 사회보장성기금 중, 국가가 고용주인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기금은 제외

관리재정수지란?

하지만 통합재정수지에는 조금 특별한 기금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기금이나 고용보험기금같은 사회보장성기금입니다. 이런 기금은 지금 당장 쓰는 돈이 아니라, 미래에 연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미리 모아두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까지 포함하면 지금의 재정 상태를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등장한 개념이 바로 ‘관리재정수지’입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흑자’로 계산되고, 이렇게 계산하면 그해의 실제 재정 상태, 즉 국가가 지금 얼마나 돈을 쓰고 버는지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 두 개를 따로 쓸까요?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보장제도가 도입(1998년 국민연금)되면서 여러 사회보장성 기금이 설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확대, 발전하는 시기에 우리나라는 사회보장기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재정수지가 흑자로 보이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라고 해도 그게 전부 ‘국민연금에서 잠깐 남은 돈’이라면 실제로 현재 쓸 수 있는 여유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재정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리재정수지라는 독자적 재정수지를 개발해 2004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여력 확보와 경기활성화 재정운용방향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저성장의 덫과 더불어 서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복합적인 위기 직면 상황에
가계 소득 직접 이전 방식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및 소비 인센티브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 경제 상황에 가장 신속하고 확실하게 소비를 진작시킬 수단으로 높은 타당성을 지니나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로드맵과 전략적 접근 필요

- 저소득층 지원이 즉각적인 소비로 이어져 내수 진작 효과 기대
- 지역화폐와의 연동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댐 역할
- 명확한 타겟팅과 사회안전망 강화로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 필요



위축된 내수, 재정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

2025년 하반기로 접어든 한국 경제는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며 심각한 내외부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OECD는 한국의 2025년 잠재성장률이 1.98%로 사상 최초로 1%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수정 경제성장률은 0.8%로 잠재성장률마저 1%를 밑돌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 경제의 핵심축인 내수는 GDP의 100%를 상회하는 가계부채와 고금리 기조로 인해 가처분소득이 위축되고 있다. 특히 2024년 말 촉발된 탄핵 정국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소비를 전면 보류시키는 심리적 충격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소비자심리지수(CSI)가 수개월째 90대 중반에 머물렀던 사실은 이를 방증하며, 탄핵이 선고된 4월 초 이후에야 소비심리가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경제 시스템의 강제적 단절을 유발한 '물리적 충격'이었다면, 계엄 사태로 이어진 탄핵 정국과 정책의 실종은 국가 시스템의 신뢰를 흔든 '심리적 충격'이었다. 이처럼 민간 부문의 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저성장의 덫(low-growth trap)'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가운데, 서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했다. 시장의 자생적 회복을 기다리기에는 민생의 고통이 심화되고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질 우려가 크다. 과거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당시 과감한 재정 투입이 국가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했듯이,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가 단행한 총 13.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및 '소비 인센티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내수 중심의 경제 성장 전략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는 가계에 소득을 직접 이전하여 즉각적인 소비 여력을 창출하고, 그 효과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설계된 정교한 정책 조합으로 볼 수 있다.

재정 투입의 경제적 타당성: '가계 소득 직접 이전'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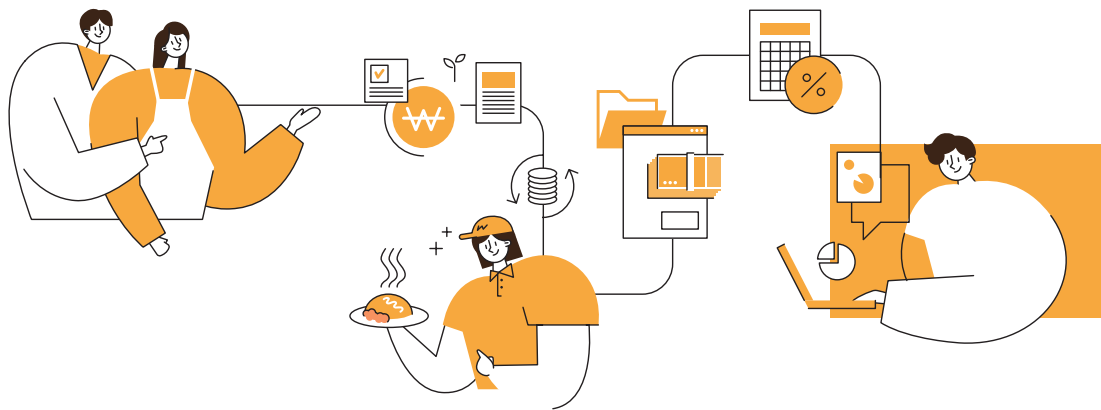
이번 정책의 핵심은 감세나 간접 지원이 아닌 '가계 소득 직접 이전' 방식을 택했다는 점이다. 이는 현 경제 상황에서 가장 신속하고 확실하게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높은 타당성을 지닌다.

'한계소비성향(MPC)'을 통한 소비 승수효과의 극대화

경제학 원리에 따르면,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추가 소득의 대부분을 즉시 소비해 '한계소비성향(MPC)'이 높다. 통계청의 2024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1분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 지출은 133.6%로,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상태였다. 이는 저소득층이 정부 지원이나 저축 감소 등으로 소비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분위와 3분위 또한 각각 79.9%, 78.5%의 높은 평균 소비 성향을 보인 반면, 4분위는 68.5%, 5분위는 55.0%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소비 성향은 감소했다.

이러한 데이터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즉각적인 소비로 이어져 내수 진작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은 정책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할 때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바로 이 지점을 정조준하여,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서민·중산층에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시도다.

이러한 효과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미국의 대규모 현금 지원(CARES Act)을 분석한 IMF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이 보고서는 CARES Act의 직접 현금 지원이 특히 저소득층과 유동성 제약을 겪는 가구를 중심으로 즉각적이고 강력한 소비 진작 효과를 나타냈으며, 경기 침체 초기에 수요 부족을 완화하여 GDP의 추가 하락을 방지하는 데 유의미하게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소득이 낮고 유동성 제약이 심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직접 현금 지원이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비 진작책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번 소비쿠폰은 단순한 현금 분배가 아닌, 가장 효과가 확실한 지점에 주사하는 '경제 부스터 샷'과 같다. 지급된 자금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직결되고, 나아가 고용 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소비의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를 통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핀셋형 소비쿠폰'을 통한 지역경제 및 특정 산업 활성화

민생회복 지원금이 소비의 '총량'을 늘리는 정책이라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의 '방향'을 유도하는 전략적 정책이다. 17.3조 원의 재원 중 일부를 쿠폰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정책 효과를 특정 지점에 집중시켜 누수를 막고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선택이다.

지역 내 선순환 경제 구축: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연동하고 사용처를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제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설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과거 연구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역내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높아 자금이 지역 내에서 2~3회 이상 회전하며 골목상권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금이 대기업으로 흡수되거나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정책적 댐(dam)'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피해 업종에 대한 정밀 지원: 팬데믹의 상흔이 깊게 남은 숙박, 관광, 문화예술, 체육시설 등 회복이 더딘 대면 서비스업에 특화된 소비쿠폰을 제공하는 것은 가장 도움이 절실한 곳에 자금을 직접 수혈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는 모든 곳에 알개 물을 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마른 눈에 집중적으로 물을 대는 것과 같은 이치로, 정책 목표 달성률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다.

성공을 위한 제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현명한 지출 설계

이처럼 뛰어난 정책적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재정 투입은 늘 날카로운 검증과 도전에 직면한다. 정책의 성공을 담보하고 그 효과를 온전히 국민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심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IMF의 분석대로 ‘긴급 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한 초기 처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직접 지원은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가중하고, 반복될 경우 한계 효용이 체감되어 비효율성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정책의 성공은 이 단기 부양의 온기를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성장의 에너지’로 전환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에 IMF(2022)의 제언처럼 ‘명확한 타겟팅’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두 축으로 하여, 소비지출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제안한다.

성공적 집행과 출구전략 제시: 우선, 단기적으로는 현 정책의 성공적 집행 및 출구전략 제시가 필요하다. 정부는 소비쿠폰이 사용처 제한 원칙에 따라 확실히 집행되도록 관리·감독하고, 그 효과를 데이터로 투명하게 공개하여 정책 신뢰도를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이번 지원이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임을 공식 선언하고, “이후 재정 운용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에 집중할 것”이라는 ‘정책 방향 전환(Policy Pivot)’을 예고해야 한다. 이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시장의 기대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효과가 있다.

소비 지원에서 역량 투자로의 전환: 둘째, 중기적으로는 ‘소비 지원’을 ‘역량 투자’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IMF 보고서가 강조했듯이, 단기적 현금 지원의 효과를 인정하되 중장기적으로는 타겟형 지원과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전환해야 한다. 여기서 ‘타겟팅 명확화’는 단순한 지원 대상 선별을 넘어 ‘성장 잠재력에 대한 타겟팅’으로 진화해야 한다. 즉, 소비를 위한 지원에서 개인과 사회의 역량을 키우는 지원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회 투자형 바우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에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신산업 분야의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미래역량 쿠폰과 폐업 소상공인이나 예비 창업가에게 초기 자금을 지원하여 실패 부담을 줄이고 혁신을 장려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재기 창업쿠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자동안정장치 강화 및 인적·사회적 자본 투자 확대: 셋째, 장기적으로는 ‘자동안정장치’ 강화 및 인적·사회적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 IMF가 강조한 ‘사회안전망 강화’는 위기 시마다 대규모 추경에 의존하지 않는 ‘자동안정장치(Automatic Stabilizer)’ 구축을 의미한다. 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를 포괄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근로장려세제(EITC)의 지급 주기를 단축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안정성을 즉각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필수적이다. 궁극적으로 재정의 역할은 인위적 소비 부양을 넘어, 교육·보육·돌봄 서비스와 같은 인적·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끌어올리는 근본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저출생 위기를 완화하며, 국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재정의 역할은 소비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잠재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는 데 있다. 중기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며 확보한 재정 여력을 ‘사람’과 ‘사회 시스템’에 투자해야 한다.



현명한 지출에 대한 사회적 합의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의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경기 침체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로드맵과 전략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재정 지출의 ‘규모’가 아니라 ‘방향’과 ‘질’이다. 우리의 재정은 이제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한 더욱 깊은 고민을 요구하고 있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넘어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현명한 지출(smart spending)’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야 할 때다. 정부는 재정 운용의 목표와 비전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성과를 엄밀히 평가받음으로써 재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복합 위기의 시대를 넘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번 재정 투입이 단순한 경기부양을 넘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 구축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국회예산정책처(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5.6).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 통계청(Statistics Korea). (2025.3). 「2024년 연간 가계동향조사 결과」.
- 한국개발연구원(KDI). (2024). 김현수. 「재난지원금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 분석: 지역화폐와 신용카드 사용 비교를 중심으로」. KDI 정책연구 시리즈.
- 한국은행(Bank of Korea). (2025.7). 「2025년 7월 경제전망보고서」.
- IMF.(2022). Chen, S., & W. Zhang. Fiscal Policy and Household Consumption during a Pandemic: Evidence from the U.S. CARES Act. IMF Working Paper No. 22/105.
- OECD.(2025.5).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5」.



소상공인이 직면한 현실과 새 정부 소상공인 재정정책 방향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삼중고로 소비침체가 장기화하여 소상공인 어려움 심화
특히 고금리 상황에서 부채 증가로 수익 상황 악화
경기와 민생회복 중심의 추경예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화폐 할인을 차등과 새출발기금 확대 지원 등 세밀한 지원 필요

- 2022년 이후 고물가, 3.5%의 고금리와 1,400원대 고환율의 삼중고로 소비침체
- 전체 자영업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 비율 75%대로 고용 불안 발생
- 올 1분기 말 기준, 취약자영업자 대체 연체율 12.24%로 12년 만에 최고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어려움 심화

2020년 초에 발발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비침체와 내수경기 침체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발발 첫해에 경제성장률은 -0.7%로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다음 해인 2021년에는 경제성장률이 4.6%로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그다음 해인 2022년 초에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여기서부터 시작된 삼중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경제가 다시 침체하며 경기 회복세가 꺾이게 된다. 2022년에 물가상승률이 5.1%였으며, 이와 함께 금리도 오르며 2023년 1월에 기준금리가 3.5%로 상승해서 2024년 8월까지 20개월 동안 3.5%의 고금리를 유지했다. 환율 또한 코로나19 이전에 1,100원대 수준에서 코로나19 확산 시점에 1,200원대 수준으로 오르더니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1,300원대 수준에서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이후 1,400원대 후반까지 올라가 고환율로 인한 물가인상 압박이 컸다. 이렇게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로 국민경제는 고비용 구조로 인한 소비침체가 구조화되는 문제가 야기되었다.

삼중고의 현황과 경제지표 변화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물가상승률(%)	0.4	0.5	2.5	5.1	3.6	2.3
경제성장률(%)	2.3	-0.7	4.6	2.7	1.4	2.0
기준금리(%) (12월 말 기준)	1.25	0.5	1.0	3.25	3.5	3.0
원/미국 달러 환율 (연간 평균)	1,166원	1,180원	1,144원	1,292원	1,305원	1,364원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이렇게 장기화한 내수경기 침체는 소상공인에 직격탄이 되었으며, 이것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이미 2023년에 자영업자 폐업이 100만 명 가까이 이르더니, 작년에는 드디어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폐업이 많아지면서 지난해에 처음으로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9.8%로, 20% 아래로 내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국가로 알려져 왔으나, 점차 그 비중이 줄면서 순위도 떨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그동안 한국 경제에서 고용의 저수지 역할을 하면서 경제에 기여한 점이 크다. 다만 이제 자영업자 고용 비중이 하락하면서 고용구조도 점차 선진국형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나, 문제는 최근의 자영업자 폐업 증가가 일자리 대안 없이 이루어지면서 고용 불안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 증대로 자영업자들이 점차 고용원을 줄이면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자 중에서 약 75%에 이르고 있다. 이는 향후 자영업에서 고용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하겠다.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수 (단위: 천 명,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취업자 수	26,904	27,273	28,089	28,416	28,57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 %)	1,372 (24.8)	1,307 (23.7)	1,365 (24.2)	1,420 (25.0)	1,432 (25.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 %)	4,159 (75.2)	4,206 (76.3)	4,267 (75.8)	4,269 (75.0)	4,225 (74.7)
전체 자영업자 수	5,531	5,513	5,632	5,689	5,657
자영업자 비중	20.6	20.2	20.0	20.0	19.8

자료: 통계청, 고용 동향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자영업 부채 증가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전년보다 1.1% 증가한 1,067조 6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히 취약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올 1분기 말 기준으로 12.24%로 12년 만에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하락과 여기에 더해 고금리 상황에서 금융 대출이 많아져 금융비용 부담까지 증가하면서 수익 상황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새 정부의 경기부양 및 민생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마련

이러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국면에서 지난 6월 4일에 출범한 새 정부는 대선 승리를 기뻐하고 축하받을 여유도 없이 경기부양 및 민생안정을 위한 2차 추가경정을 30조 5천억 원 규모로 준비했다. 이는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31조 8천억 원으로 증액되어 지난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의결된 내용을 보면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 9천억 원 증액되었다.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정부안)

기본 방향	① 경기부양(소비·투자 촉진)과 ② 민생안정 등에 중점 투자하여 어려운 경기·민생 여건의 조속한 회복 도모																						
주요 내용	총 30.5조 원 (세출 20.2조 원 + 세입 10.3조 원) <table><tr><td>경기 부양</td><td>15.2조 원</td></tr><tr><td>• 소비여력 보강</td><td>11.3조 원</td></tr><tr><td>• 건설경기 활성화</td><td>2.7조 원</td></tr><tr><td>•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td><td>1.2조 원</td></tr><tr><td>민생 안정</td><td>5.0조 원</td></tr><tr><td>• 소상공인 재기 지원</td><td>1.4조 원</td></tr><tr><td>• 고용안전망 강화</td><td>1.6조 원</td></tr><tr><td>• 취약계층·물가안정 지원</td><td>0.7조 원</td></tr><tr><td>• 지방재정 보강 등</td><td>1.3조 원</td></tr><tr><td>세입경정</td><td>10.3조 원</td></tr><tr><td>• 금년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으로 경기대응 투자여력 확보</td><td></td></tr></table>	경기 부양	15.2조 원	• 소비여력 보강	11.3조 원	• 건설경기 활성화	2.7조 원	•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1.2조 원	민생 안정	5.0조 원	• 소상공인 재기 지원	1.4조 원	• 고용안전망 강화	1.6조 원	• 취약계층·물가안정 지원	0.7조 원	• 지방재정 보강 등	1.3조 원	세입경정	10.3조 원	• 금년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으로 경기대응 투자여력 확보	
경기 부양	15.2조 원																						
• 소비여력 보강	11.3조 원																						
• 건설경기 활성화	2.7조 원																						
•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1.2조 원																						
민생 안정	5.0조 원																						
• 소상공인 재기 지원	1.4조 원																						
• 고용안전망 강화	1.6조 원																						
• 취약계층·물가안정 지원	0.7조 원																						
• 지방재정 보강 등	1.3조 원																						
세입경정	10.3조 원																						
• 금년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으로 경기대응 투자여력 확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경기와 민생회복 중심으로 예산이 마련되고 집행되게 된 것은 다행이라 하겠다. 지금의 민생경제가 워낙 좋지 않은 상황이기에 정부 지원정책 마련과 시행이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그 예산집행에서 그 성과가 클 수 있도록, 즉 추경예산이 소비심리를 높이고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지역화폐 발행 지원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화폐 인기 정도를 고려하여 할인율 차이를 좀 더 높여야 한다. 지방은 7~15%의 할인율 적용을 20%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 내수경기가 침체 되면서 지방의 지역경제는 더 악화하고 있어서 할인율을 높여 지방에서 지역화폐 수요가 많아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민생안정예산에서 소상공인 재기지원에 1조 4천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폐업이 많아지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적절한 편성으로 평가된다. 재기지원의 주요 내용 중 장기연체채권 소각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려 받은 대출을 상환은 고사하고 이자도 못 갚을 경우 부실채권이 되는데, 이에 대해 채권 소각으로 새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물론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대출 상황을 면밀히 살펴 대출이 사업 목적이 아닌지를 구별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새출발기금 확대 지원은, 그동안 수요는 많은데 충분히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이번에 기금 확대로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이 좀 더 확대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 하겠다.



향후 소상공인 유형에 따른 맞춤형 정책으로 정책성과 제고 필요

지금까지의 소상공인 정책은 대체로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이며, 그러한 정책의 획일성으로 정책 성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소상공인이 처한 상황에 따른 맞춤형 정책으로 정책 성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00만여 명의 소상공인은 매출 크기도 차이가 크고, 각자가 처한 입장이 다양하기에 획일적인 정책으로는 그 성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정책으로 그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소상공인을 매출 규모에 따라 사업형 소상공인과 생계형 소상공인으로 분류하여 그에 맞는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사업형 소상공인과 생계형 소상공인 분류 기준은 간이과세자 기준(연간 매출액 1억 400만 원)으로 하는 것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사업형 소상공인은 진흥정책 중심으로 지원하고 경쟁력 증대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형 소상공인은 진흥정책을 통해 법인화 및 중소기업으로 성장토록 지원하는 성장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영세 규모의 생계형 소상공인은 복지정책 차원으로 접근하여 정책의 성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강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소상공인의 구매 경쟁력 증대를 위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지원체제 강화

영세 소상공인은 담보력과 신용도가 낮아서 자금이 필요할 때 이자율이 높은 대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체제 강화를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소매업 소상공인을 위한 공동 물류의 경우 대부분 Cash and Carry 방식이고 배송이 되더라도 현금이나 카드거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공동물류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 신용이 약한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신용보증을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지원책 강화가 필요하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집행이 목적하는 경기부양 및 민생안정을 충분히 이루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그러나 내수경기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통해 소비심리를 일정 정도 회복시키면서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새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함께 그동안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한 실효성 높은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재정칼럼에 이어 48페이지 재정이 Money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를 만나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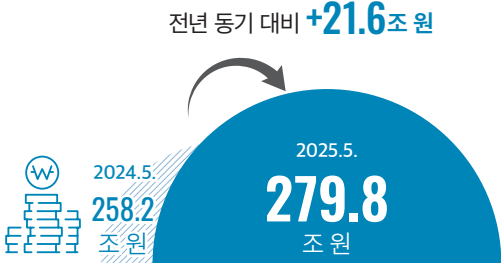


재정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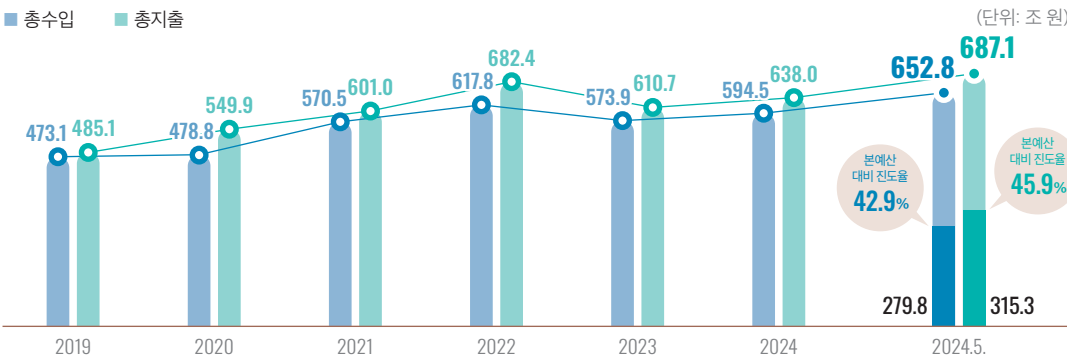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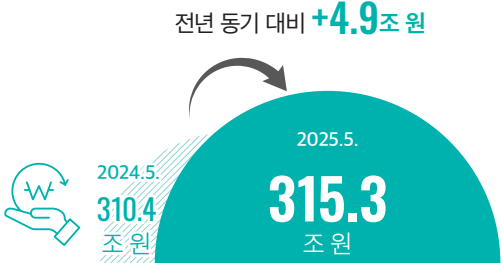
2025년 5월 기준

총수입·총지출

총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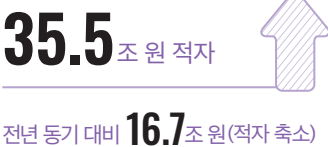
총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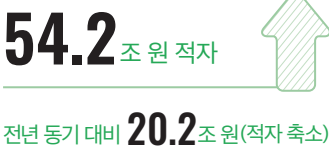
주: 2024년까지는 결산, 2025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5.7.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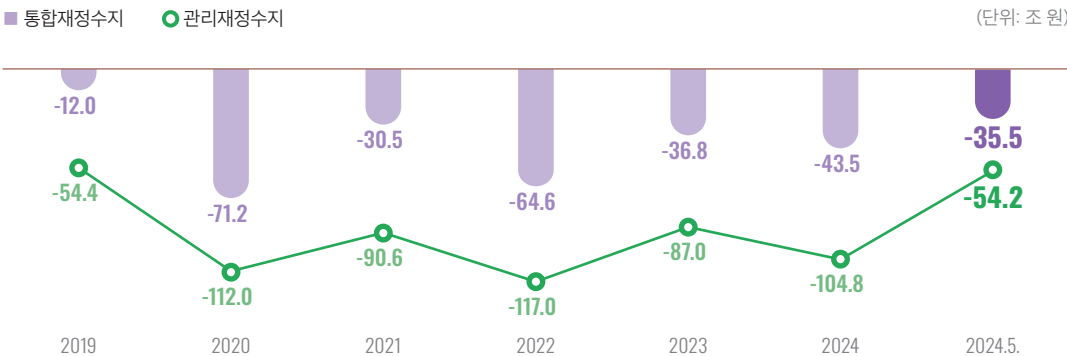
관리재정수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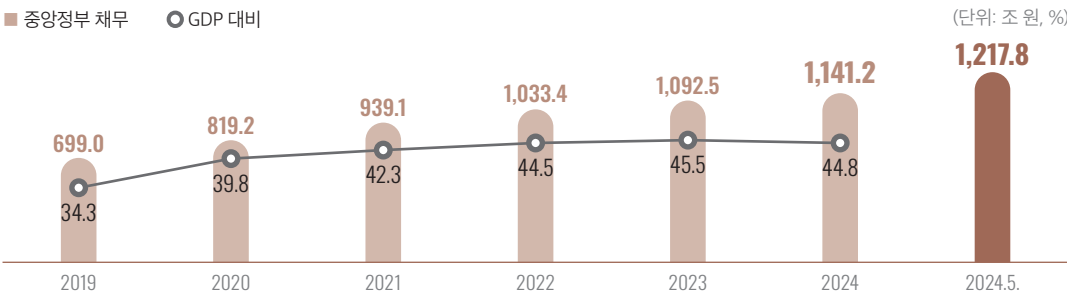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2)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3)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5.7.



주: 2024년까지는 결산, 2025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5.7.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주: 1) 2024년까지는 결산, 2025년은 본예산 기준
2) 중앙정부 채무 기준
3)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
4) 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한국은행 GDP 규모 확정 시 수정 반영 예정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5.7.



주요국 월간 재정통계

총수입
총지출
수지

미국 5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8개월 차)	규모	3조 4,817억 달러	4조 8,464억 달러	1조 3,647억 달러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5.9%	7.9%	13.5%
독일 5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5개월 차)	규모	1,656억 유로	1,983억 유로	328억 유로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7.4%	8.2%	13.1%
일본 4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1개월 차)	규모	2조 5,892억 엔	15조 902억 엔	12조 5,010억 엔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54.3%	11.5%	59.0%
프랑스 5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5개월 차)	규모	1,410억 유로	2,145억 유로	735억 유로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8.9%	-3.3%	-20.3%
영국 5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2개월 차)	규모	1,823억 파운드	2,200억 파운드	377억 파운드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6.3%	6.0%	4.5%

**자료 : •미국)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Monthly Treasury Statement : May 2025(6.11. 발표)
•독일) Federal Ministry of Finance, Overview of federal budgetary and financial data up to and including May 2025(6.20. 발표)
•일본) 재무성, 국고 세입세출 상황(6.20.발표). 일반회계 기준이며 수지는 공식 발표치가 없어 세입-세출 잔액으로 자체 계산한 수치임. 일본의 일반회계 수입은 공채(국채)연간 발행 일정 및 이에 따른 수입변동으로 월별 변동이 큼
•프랑스) La situation du budget de l'État au 31 mai 2025(7.2.발표)
•영국)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Public sector finances, UK: May 2025(6.20. 발표)

대한민국 5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5개월 차)	규모	279.8조 원	315.3조 원	35.5조 원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8.4%	1.6%	-32.0%

해외재정동향

재정정보분석센터

주요국

1 | 미국

- 트럼프의 무역 정책(고율 관세)이 미국 내 기업들의 가격 인상과 인력 감축을 초래, 소비자들의 지출 축소에 영향
-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베트남과 예비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
- 세금 감면·복식 삭감을 포함한 대규모 정책안 하원 가결

4 | 프랑스

- 재무장관, 정부가 재정 균형을 바로잡지 않으면 IMF나 EU 등 외부 기관의 재정 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
- 통계청(INSEE)은 프랑스 경제가 제조업 부진과 공공부문 지출 억제 영향으로 올해 연간 0.6%의 완만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2 | 독일

- 6월 독일의 기업 신뢰지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승
-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 독일 경제 회복 위해 460억 유로 규모의 법인세 감면 계획

5 | 영국

- 영국 노동당, 정부의 지출 검토(Spending Review) 발표
- 재무장관, 예산감독기구(OBR)의 경제 전망 향조정으로 200억 파운드 재정 공백 우려

3 | 일본

- 일본 정부, 임금 인상, 노동시장 개혁, 투자 촉진 등을 통해 실질 소득 향상을 추진
- 가쓰노부 가토 재무장관, 적절한 부채 관리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
- 가계 지출이 전년 동월 대비 4.7% 증가하며, 3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

6 | 중국

- 중국 정부, 내수 진작을 위한 금융 지원 지침 발표
- 6월 중국 제조업 생산 활동, 3개월 연속 축소

국제기구

1 | IMF

- “미국의 국채한도와 레포시장 변동성(Repo Market Volatility and the U.S. Debt Ceiling)” 워킹페이퍼 발간
- “장기 회복탄력성과 성장을 위한 거시경제 프레임워크(A Macroeconomic Framework for Long-Term Resilience and Growth)” 워킹페이퍼 발간

2 | OECD

- “개발을 위한 조세협력(Tax Co-operation for Development)” 보고서 발간
- “국경 없는 조세감사관 연례보고서 2025(Tax Inspectors Without Borders Annual Report 2025)” 보고서 발간

주요국

미국



6.18. 트럼프의 무역 정책(고율 관세)이 미국 내 기업들의 가격 인상과 인력 감축을 초래, 소비자들의 지출 축소에 영향¹⁾

- 기업들은 관세와 그로 인한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조정과 가격 인상을 추진 중
 - JetBlue는 항공편 감축과 조직 개편을 진행 중이고 P&G는 비제조 부문 인력의 약 15%인 7,000명을 감축하며 관세로 인한 6억 달러의 비용을 가격 인상으로 보전할 계획
 - Walmart는 소비자 신뢰 악화를 우려하며 가격 인상을 경고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기업이 관세 비용을 흡수하라”고 발언함
- 5월 소매판매는 자동차 및 건축 자재 등 주요 품목에서의 구매 감소로 크게 하락
 - 이는 관세 시행 전 대형 소비를 앞당긴 기저 효과일 가능성
- 외식 및 여가 지출도 감소세를 보이며 전반적인 소비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최근 매켄지 설문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인플레이션과 관세를 가장 큰 경제 불안 요인으로 꼽고 있으며, 다수는 관세 때문에 소비 습관을 바꾸고 있다고 응답

7.2.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베트남과 예비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²⁾

- 이 합의에 따라 베트남산 제품에 부과되던 일부 고율 관세가 완화되고, 대신 베트남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시장 접근을 확대
- 우회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베트남 제품에는 최대 40%의 높은 관세가 부과될 예정
 -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 이번 합의는 4월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에 고율 관세를 선언한 이후 베트남이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과 제한적 협정을 맺은 사례
 - 그러나 미국 내 업계와 전문가들은 여전히 높은 관세율, 원산지 규정의 불명확성, 공급망 혼란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
 - 특히 베트남에 생산 기반을 둔 미국 기업들은 이번 조치가 자국 소비자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

1) <https://www.nytimes.com/2025/06/18/business/fed-tariffs-inflation-companies.html?searchResultPosition=9>

2) <https://www.nytimes.com/2025/07/02/business/economy/trump-vietnam-trade-deal.html?searchResultPosition=1>

7.3. 세금 감면·복지 삭감을 포함한 대규모 정책안 하원 가결³⁾

- 법안은 2017년 감세 조치의 연장선과 함께 팁 및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새로운 세금 감면을 포함해 총 4.5조 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을 제공
 - 국방 및 국경 보안 예산을 증액한, 반면 메디케이드*와 저소득층 식품 보조 등 복지 프로그램 예산을 약 1조 달러 삭감
- * 메디케이드(Medicaid): 미국의 공공 의료보장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 제도
- 또한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국가 부도 방지를 위해 부채 한도도 5조 달러 증액
- 민주당은 이 법안을 “건강보험과 복지에 대한 전면 공격”이라 비판하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
 - 의회예산국(CBO)은 해당 조치가 향후 10년간 국가 부채를 3.4조 달러 증가시키고, 메디케이드 수급자 약 1,180만 명이 보험을 잃을 수 있다고 분석

독일



6.24 6월 독일의 기업 신뢰지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승⁴⁾

- 뮌헨 소재 Ifo 연구소, 독일 기업들의 전반적인 경기 전망과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 모두 개선
 - 이는 유럽 최대 경제인 독일이 점진적인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
- Ifo의 기업 신뢰지수는 89.3으로 상승해 지난 1년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88.0을 웃도는 수준
 - 특히 제조업과 무역 부문에서 개선세가 두드러졌고, 서비스업에서도 낙관적 전망이 확대
 - 다만 건설업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취약

6.26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 독일 경제 회복 위해 460억 유로 규모 법인세 감면 계획⁵⁾

- 독일의 신정부는 경기 부진에서 탈출하고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여름 중 460억 유로 규모의 법인세 감면 패키지 도입을 추진 중
 - 새로운 장비나 전기차 구매 인센티브 같은 투자 촉진 요소를 포함하며, 2029년까지 시행될 예정

3) <https://www.nytimes.com/2025/07/03/us/politics/house-trump-bill-obbb.html?smid=url-share>

4)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german-business-sentiment-rises-june-ifo-survey-finds-2025-06-24/>

5) <https://www.ft.com/content/ec3e35ea-3c8d-414d-a45f-75be9881a363>

일본



- 이 계획은 메르츠 총리 주도의 대규모 공공 인프라 투자와 함께 진행되며, 민간 기업의 투자 유인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전문가들은 감세 조치가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으나, 제도 전반의 규제 부담 완화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

6.6. 일본 정부, 임금 인상, 노동시장 개혁, 투자 촉진 등을 통해 실질 소득 향상을 추진⁶⁾

- 기시다 총리가 지난해 발표한 일시적 소득세 감세 조치와는 다른 중장기 전략의 일환
- 일각에서는 감세가 소비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 정부 역시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와 재정 건전성 유지를 고려해 보다 균형 잡힌 접근을 취하려는 시도
- 일본 경제의 구조적 개혁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

6.10. 가쓰노부 가토 재무장관, 적절한 부채 관리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⁷⁾

- 일본은행이 채권 매입을 축소하는 가운데, 다양한 투자자들이 일본 국채(JGB)를 매입하도록 유도하고 시장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부채 관리 정책을 추진할 계획
- 구체적인 방안으로 단기 금리에 연동된 변동금리 채권 발행과 개인 투자자용 국채 매입 허용 확대, 비상장 기업도 참여 가능한 채권을 도입할 계획 언급
- 또한, 정부는 채권 수익률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 국채 일부를 재매입하거나 신규 발행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일본 내외의 국채 수요 감소와 수익률 상승 압력 속에서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



6) <https://www.reuters.com/en/japans-government-say-it-is-not-relying-tax-cuts-boost-income-2025-06-06/>

7)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markets/stocks/news/debt-management-japans-new-bond-strategy-amid-boj-taper/prudent-debt-management/slideshow/121745229.cms?from=mdr>

7.4. 가계 지출이 전년 동월 대비 4.7% 증가하며, 3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⁸⁾

- 2025년 5월 일본의 가계 지출이 전년 동월 대비 4.7% 증가하며 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 이는 시장 예상치인 1.2%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자동차 및 외식 관련 일회성 지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
- 월간 기준으로 전월 대비 4.6% 급증했으며, 이는 2021년 3월 이후 최고 수준
- 2025년 일본 기업들의 평균 임금이 5.25% 인상하고, 물가 상승 둔화와 함께 실질 소득 증가 전망으로 소비 회복에 기대
- 다만, 미국의 고율 관세 위협(30~35%)이 기업 수익 및 임금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존재(7일 발표기준, 25% 관세율을 8월 1일부터 시행)
-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계획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

프랑스



6.10. 재무장관, 정부가 재정 균형을 바로잡지 않으면 IMF나 EU 등 외부 기관의 재정 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⁹⁾

- 프랑스는 올해 GDP의 5.4%에 달하는 유로존 최대 재정적자 전망
- 2026년에는 40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삭감 계획을 발표할 예정
- 아멜리 드 몽탈랭 장관은 RTL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재정 무장을 하지 않으면, 다른 이들이 우리를 대신 결정할 것”이라며 시급한 조치를 촉구
- EU의 재정 준칙 위반 경고가 거듭된 가운데 정부가 자발적 재정 긴축을 통해 외부의 간섭을 막으려는 전략적 책임감을 반영

6.19. 통계청(INSEE)은 프랑스 경제가 제조업 부진과 공공부문 지출 억제 영향으로 올해 연간 0.6%의 완만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¹⁰⁾

- 2분기를 시작으로 분기별 성장률은 평균 0.2%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
- 소비 지출은 여름 한때 0.4%까지 상승했다가 연말에는 0.3%로 둔화할 전망
- 소비 둔화와 재고 보충이 일부 성장 동력을 견인하지만, 수출 부진이 0.7%p 정도의 성장을 하방 압력으로 작용

8) <https://www.reuters.com/markets/asia/japan-may-household-spending-rises-47-year-year-2025-07-03/>

9) <https://www.straitstimes.com/world/europe/french-budget-minister-warns-of-imf-eu-oversight-risk>

10) <https://www.reuters.com/markets/europe/french-economy-grow-06-this-year-insee-says-2025-06-18/>

영국



- 인플레이션은 평균 1% 내외, EU 기준으로는 0.8%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력과 통신 요금 인하의 영향으로 풀이
- 성장률은 정부 목표치인 0.7%보다 낮아 재정 적자율 5.4% 목표 달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6.11. 노동당, 정부의 지출 검토(Spending Review) 발표¹¹⁾

- 건강(NHS), 국방, 사회주택, 청정에너지 및 인프라에 집중 투자를 진행하며, 일반 운영비 지출은 대부분 부처에서 제한되고, 복지·문화·외교 예산은 삭감 조치
 - 건강(NHS)에는 연간 약 300억 파운드가 추가 배정돼 실질 3% 증액, 국방부에는 GDP의 2.6% 까지 예산 확대, 주택부에는 향후 10년간 390억 파운드 규모의 사회주택 예산 확보
- 반면, 법무부, 외교부, 내무부, 지방정부, 교육부 등은 실질 예산 삭감
 - 특히 경찰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가 커, 치안 계획 목표 달성이 위태롭다는 지적과 함께 추가 재정수요가 예상되는 한편, 정부는 효율성 개선이나 디지털·AI 투자로 보완한다는 방침

6.15. 재무장관, 예산감독기구(OBR)의 경제 전망 하향 조정으로 200억 파운드 재정 공백 우려¹²⁾

- 재무장관 레이첼 리브스는 독립 예산감독기구인 OBR(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이 경제성장 및 생산성 전망을 하향 조정할 경우, 가을 예산에서 최대 200억 파운드의 조세·지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
 - 리브스 장관은 비협상적 재정규칙을 고수하기 위해 이 재정부족을 위한 세금 인상이나 지출 삭감 가능성을 시사
- 시장 분석가들은 OBR 전망으로 140억 파운드 정도의 재정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120억~200억 파운드 규모가 될 수 있다고 예상
 - 리브스는 이에 대비해 소득세 한도 동결과 같은 방식의 증세, 복지 지출 조절, 자산·법인세 개편 등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

11) <https://www.thetimes.com/uk/politics/article/spending-review-latest-news-rachel-reeves-live-wlnr2k8wq>

12)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25/jun/15/reeves-obr-revised-forecast-tax-spending-plans-20bn-hole-autumn-budget>

중국



6.24. 정부, 내수 진작 위한 금융 지원 지침 발표¹³⁾

- 중국인민은행 등 6개 중앙기관은 금융 수단을 활용해 소비 촉진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
 - 취업과 가계소득 증대에 집중하며, 소비업체 상장을 지원하고 소비자 ETF, 서비스 기업 채권, 인프라 REITs 발행을 장려하는 금융 채널 확장
 - 지급 준비율 조절, 공개시장 조작 등의 정책 도구를 사용해 금융 유동성을 유지하고 사회 전체 금융비용을 완화하기로 결정
- 또한, 5,000억 위안 규모의 노인·서비스 소비용 재용자 시설을 도입
- 은행들에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소비자 대출 상품을 혁신하고, 소비 중심 금융 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요청

6.30. 6월 중국 제조업 생산 활동, 3개월 연속 축소¹⁴⁾

- 2025년 6월 중국의 공식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7로, 3개월 연속 50 아래를 기록하며 경기 수축 국면이 이어짐
 - 지난 5월 49.5에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성장과 수축의 경계선인 50을 밑돌아, 미국의 관세 압박과 내수 부진 상황이 지속
- 비록 신규 내수 주문과 구매량은 개선됐지만, 고용과 수출 주문, 공장 출하 가격은 여전히 하락세가 계속되며, 제조업 경기 회복은 불투명
 -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추가 재정·통화 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제기



13) <https://www.reuters.com/markets/asia/china-issues-guidelines-financial-support-boosting-consumption-2025-06-24/>

14) <https://www.reuters.com/markets/europe/subbedshn-chinas-manufacturing-activity-shrinks-third-month-june-pmi-shows-2025-06-30/>



6.27. “미국의 국채한도와 레포시장* 변동성(Repo Market Volatility and the U.S. Debt Ceiling)” 워킹페이퍼 발간¹⁵⁾

- 미국의 반복적인 부채한도 교착 상황이 단기 자금조달시장, 특히 레포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레포시장(Repo Market): “Repurchase Agreement(환매조건부 채권매매)”라는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단기 자금 시장으로, 레포(repurchase agreement)는 채권을 담보로 단기 자금을 빌리고, 일정 기간 후 같은 가격에 다시 되사는 조건의 계약을 의미

- 부채한도에 따른 재무부 일반계정의 자금 유입과 유출은 시스템 내 은행준비금 변동을 초래하고, 이는 레포 스프레드의 급등락을 유발

- 특히 2025년 여름의 부채한도 해제 시점에는 레포 스프레드가 20~30bp까지 흔들릴 수 있으며, 이는 코로나 이후 평균 변동성(10bp 미만)의 2~3배에 달하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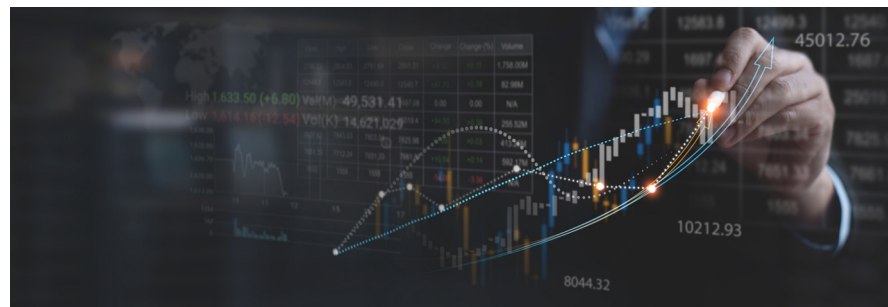
- 연준의 준비금 수준과 초과준비금 잔액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

7.4. “장기 회복탄력성과 성장을 위한 거시경제 프레임워크(A Macroeconomic Framework for Long-Term Resilience and Growth)” 워킹페이퍼 발간¹⁶⁾

- 저성장, 높은 부채, 기후변화 등 구조적 도전에 직면한 국가들을 위해 장기적 회복탄력성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거시경제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시

- 통화정책, 재정정책, 구조개혁을 통합한 접근법을 강조
- 특히 공공투자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디지털 및 녹색전환 지원 등을 통해 경제의 생산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시

- 또한, 정책조합(policy mix)의 조율과 장기적 재정 여력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



15)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P/Issues/2025/06/27/Repo-Market-Volatility-and-the-U-S-568023>

16)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P/Issues/2025/07/03/A-Macroeconomic-Framework-for-Long-Term-Resilience-and-Growth-568245>



6.30. “개발을 위한 조세협력(Tax Co-operation for Development)” 보고서 발간¹⁷⁾

- 개발도상국의 조세제도 개선과 세수 확대를 위한 국제적 조세협력의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다룸

- 특히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프로젝트, 국가 간 금융계좌 정보 자동 교환 제도, 상호행정지원 협약의 확대 참여 등이 핵심 정책 도구로 강조

*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다국적 기업들이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소득을 인위적으로 세율이 낮은 나라(조세회피처)로 이전하거나, 비용을 세율이 높은 국가에 집중시키는 행위

- 이를 통해 조세 회피와 탈세를 줄이고 조세 투명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

- OECD는 기술적 역량이 부족한 국가들이 국제 조세표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행정 역량 강화, 감사 실무 훈련 등의 맞춤형 기술 지원을 제공

- 이 과정에서 조세정의(Tax Justice)*를 중심 개념으로 삼아, 다국적기업과 고자산층의 공정한 조세 부담을 유도

* 조세정의(Tax Justice): 조세 제도가 사회 정의, 형평성, 투명성에 기반하여 설계·집행되어야 한다는 윤리적·정치경제적 개념

7.2. “국경 없는 조세감사관 연례보고서 2025(Tax Inspectors Without Borders Annual Report 2025)” 보고서 발간¹⁸⁾

- OECD와 UNDP가 공동 운영하는 Tax Inspectors Without Borders (TIWB)* 프로그램의 2024년까지의 누적 성과와 향후 전략 방향을 정리

* TIWB: 개발도상국 세무당국과 파견 전문가(현직 세무관, 회계사 등)를 직접 연결하여, 실제 세무조사 현장에서 동행 지원 및 실무 교육을 제공하는 형태의 ‘현장 기반 기술협력 모델’

-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93개 프로젝트가 67개국에서 수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약 20억 달러 이상의 세수 확보를 유도하는 실질적 성과

- 특히 이전가격 감사, 자원산업 과세,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대응, 부유층 세무조사 등 고난이도 분야에 집중 지원

- 향후 전략 과제로 ①디지털 경제 과세 이슈 대응 ②지속가능한 세무행정 시스템 정착 ③범지역 간 협업 확대 ④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 내재화를 강조

17)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tax-co-operation-for-development_cf95c967-en.html

18)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tax-inspectors-without-borders-annual-report-2025_e9762366-en.html

베네치아 교역의 바다를 밝힌 빛의 예술

저 유명한 ‘베니스의 상인’은 16세기 베네치아를 배경으로 한 셰익스피어의 희극이다. 정작 셰익스피어는 베네치아를 가 본 적이 없는데, 그에 반해 소설속엔 당시 베네치아에 대한 묘사와 인물들에 대한 모습이 비교적 상세하게 나온다. 그만큼 이 시기 베네치아는 여러 나라와 다양한 교역을 하면서 활발하게 교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글·전원경 예술 전문 작가, 세종사이버대 교수



01 종탑과 산 조르조 마지오레 성당

조지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 1834년, 캔버스에 유채, 91.5X122cm, 국립미술관, 워싱턴 D.C.

‘아드리아해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베네치아는 유럽을 찾는 여행객들이 영원히 꿈꾸는 도시 중의 도시다. 바다 위에 모인 여러 섬의 집합체로 이루어진 베네치아는 매년 늘어나는 관광객들을 맞느라 늘 몸살을 앓고 있다. 연간 2천만 명에서 최고 3천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이 베네치아를 찾는다. 유럽의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논할 때 베네치아가 빠지지 않는 이유는 이 도시의 거주 환경이 매우 독특하기 때문이다. 도시 자체가 바다 위에 떠 있는 형상이라 건물 하나를 세우기도 쉽지 않고 자동차나 기차 등도 오갈 수 없다. 100여 개의 섬은 보행자 전용 다리로 연결되고 수상버스와 곤돌라들이 섬들 사이 운하를 오간다. 엄밀히 말하면 베네치아의 환경은 매우 열악한 편이다.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도 베네치아는 일찍이 무역 강국이자 해상 강국으로 전 유럽에 군림해 왔다. 베네치아 하면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단어 중의 하나가 셰익스피어의 희곡 제목인 ‘베니스의 상인’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 이 희곡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셰익스피어는 ‘베니스의 상인’을 1596년 런던에서 집필했다. 런던과 베네치아 사이의 제법 먼 거리를 감안해 보면, 이 당시 영국과 이탈리아의 상인들 사이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베네치아 상인들의 주도면밀함이 바다 건너 영국에까지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베니스의 상인’에 등장하는 샤일록의 성격에서 알 수 있듯이, 베네치아 사람들은 매우 냉정하며 놀라울 정도로 실리를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아무것도 나지 않는 개펄에서 생존하기



02 바쿠스와 아리아드네

티치아노 베첼리오, 1520~23년, 캔버스에 유채, 176.5X191cm, 내셔널 갤러리, 런던

위해서는 바깥으로 나가야만 했고 이는 곧 교역으로 이어졌다. 특히 사치품의 수입과 무역에서 베네치아 상인들이 차지한 자리는 막강했다. 13세기 중반의 베네치아 상인 마르코 폴로가 중국 원나라 궁정까지 진출했다는 일화로도 알 수 있듯이, 베네치아는 유럽과 아시아 사이를 잇는 보루 역할을 하며 그 사이에서 이익을 톡톡히 챙겼다. 바다 위에 세워진 도시라는 지리적 특성은 회화

에도 미묘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도시를 둘러싼 바다는 종일 햇빛과 달빛을 반사해서 베네치아 화가들을 빛에 예민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더해 무역의 중심지인 베네치아에서는 쉽게 다양한 물감의 원료들을 구할 수 있었다. 베네치아 르네상스 화가들의 화려하고도 명징한 색채감은 결국 도시의 특성을 십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베네치아의 밝은 하늘과 바닷빛은 베네치아 르네



03 베니스의 상인의 샤일록과 제시카(제2막 제2장)

카날레토, 1730년, 캔버스에 유채, 49.6X73.6cm, 휴스턴 미술관, 휴스턴

상스의 전성기를 이끈 티치아노(1488/90~1576)의 '바쿠스와 아리아드네'의 하늘에서 밝게 빛난다. 티치아노는 장방형에 가까운 캔버스를 왼쪽 아리아드네의 세계와 오른쪽 바쿠스의 세계로 나누었다. 아리아드네에게 반한 술과 축제의 신 바쿠스는 사랑의 힘에 의해 어둡고 음험한 세계에서 맑고 푸른 아리아드네의 세계로 끌려가고 있다. 바쿠스는 아리아드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노라'고 선언하며 그녀의 왕관을 벗겨 막 하늘로 던진 참이다. 그림 왼쪽 위편, 푸른 하늘에서 동그란 별자리가 빛나고 있다. 아리아드네의 관이 왕관자리로 변한 것이다. 티치아노는 그림을 통해 사랑에 빠진 남녀의 격렬한 감정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베네치아의 르네상스 회화는 감각적이며 보는 이에게 그림을 보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답게 베네치아 화가들은



04 대운하로 들어가는 길목

카날레토, 1730년, 캔버스에 유채, 49.6X73.6cm, 휴스턴 미술관, 휴스턴

그림이 값비싼 돈을 주고 수집할 만한 귀중품임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걸작들을 그려냈다.

티치아노가 구사한 화려한 색감은 이 지역 화가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물감을 구할 수 있었다는 이점에 기인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베네치아 화가들이 활동 터전이 유럽 그 어느

지역보다 평등하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였다는 데 있다. 티치아노의 그리스 신화 속 세계는 인간의 감정이 살아 움직이고, 성적 욕망이 꿈틀거리며, 기쁨과 고통, 슬픔과 죽음이 모두 손에 잡힐 듯 생생한 세계다.

카날레토의 그림 속에서 되살아난 베네치아

베네치아의 영광은 16~17세기의 종교 분쟁과 함께 서서히 시들어갔으나 유럽인들은 여전히 베네치아를 동경하고 있었다. 이 도시에는 '라 페니체'를 비롯한 열다섯 군데 이상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되는 오페라들, 카날레토와 구아르디가 구현한 투명하고 아름다운 베네치아 풍경화가 있었다. 카날레토(1697~1768)의 그림 속 베네치아 풍경, 밝은 바닷빛을 받으며 찬연하게 빛나는 베네치아는 이탈리아를 찾아온 영국과 독일의 그랜드 투어리스트들에게 인기 있는 '기념품'이었다. 재미있게도 베네치아를 그린 카날레토의 풍경화는 현재 베네치아에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의 풍경화는 완성되는 족족 그랜드 투어리스트들의 손에 팔려가서 베네치아를 떠났다. 카날레토는 아버지의 도제로 그림 경력을 쌓기 시작했는데, 그의 아버지는 베네치아와 로마의 극장에서 배경을 그렸던 화가였다. 카날레토의 그림이 명쾌한 공간감과 깊은 원근법을 구사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개인적 배경과 연관이 있다.

베네치아를 찾아온 그랜드 투어리스트 중에는 예술가들이 적지 않았다. 영국 화가 조지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1775~1851)는 1819년 처음 베네치아를 방문하고 1833년과 1840년에 재차 베네치아를 찾았다. 터너는 원래 바다와 파도에 대해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도시 어디서나 바다를 마주칠 수 있으며 청명한 남국의 햇살로 빛나는 베네치아는 터너의 취향을 골고루 만족시킬 수 있는 도시였다. 터너가 베네치아를 찾은 후로 반세기가 흐른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마네, 모네, 사전트, 르누아르 등도 이 물의 도시를 방문한 기록을 그림으로 남겨놓았다.

'베네치아'라는 도시의 명칭은 '오고 또 오라'는 라틴어 '베니 에티암(Veni eitam)'에서 기인했다고 한다. 정말로 이 도시는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원한 영감과 그리움의 원천, 푸르게 빛나는 바다의 원형으로 자리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지방자치제 30년과 재정분권

배국환 前 기획재정부 제2차관



올해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1992년 지방의회 의원에 이어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실시되면서 민선 자치 시대가 열린 것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다. 당시 사람들은 폴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지역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 희망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민들의 주권 의식이 높아졌고 행정서비스의 질이 주민밀착형으로 개선되는 등 과거와 다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자치단체장들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 인구는 감소하고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상당 부분은

심각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빈축을 사는 경우도 많다.

지방자치 30년을 맞이하여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우선 지방정부에서는 할 말이 많다. 자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만들어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앙정부는 시어머니처럼 잔소리나 하고 정치적으로 줄서기만 강요한다면 불만을 토로한다. 특히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직도 크게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반쪽짜리 자치’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필자는 우연히 행정자치부와 자치단체에서 지방 재정을 접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 자주 들었던 통계

지표가 하나 있다. 중앙과 지방은 세수로는 대략 8:2인 반면 세출 기준으로는 4:6으로 지방이 훨씬 지출이 많아서 지방은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시행되던 1995년 이후 한동안 이 지표는 별 변화가 없었으나 참여정부 들어 시작된 재정 분권화 정책에 따라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다.

돌이켜 보면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분권 정책은 다양한 방법으로 조금씩 진일보해 왔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덩치가 큰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이 올랐고, 지방의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신설되고 꾸준히 인상되어 왔다. 그 결과 세수 기준으로 중앙과 지방의

재원을 비교해 보면 자치제 실시 당시에 82:18에서 2020년에는 74:26까지 신장했다. 그만큼 지자체의 자율성이 커졌다고 보면 된다. 자치단체장 입장에서 보면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었지만 중앙 정부 재정당국자들이 볼 때는 아마도 커다란 배려(?)를 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제도를 바꾸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필자는 2005년 중앙정부 재정당국자 신분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실무 책임자 역할을 담당한 적이 있다. 친정과 시댁 사이에서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난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재정분권의 역사(지방교육자치 제외)	
제도	변천내용
지방교부세 법정률	(‘83-’99)내국세의 13.27% → (‘00)15% → (‘05)19.13% → (‘06)19.24% * ‘25: 60.4조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04)신설 * ‘25: 14.7조 원
부동산 교부세	(‘05)신설(종합부동산세 전액) * ‘25: 4.0조 원
분권교부세	(‘05)신설 → (‘15)폐지
지방소득세	(‘10)신설(주민세, 사업소세 개편) → (‘13)독립세화 * ‘25: 20.6조 원
지방소비세	(‘10)신설(부가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 → (‘14)11% → (‘19)15% → (‘20)21% → (‘22)23.7% → (‘23)25.3% * ‘25: 26.7조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10)신설
소방안전교부세	(‘15)신설(담배소비세의 20%) → (‘19)35% → (‘20)45% * ‘25: 9,856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1)신설(10년간 매년 1조 원 출연)

주: 2025년 재정규모는 예산기준 자료임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전국 어디를 가나 돌레길과 출렁다리를 쉽게 볼 수 있다.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거리가 많아져 좋은 측면도 있지만, 지방들이 천편일률적으로 개성을 잃어 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주권자는 재정자주권이 강화되는 것을 반기지만 똑같은 볼거리만 제공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지 않을까.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기관장들은 선거를 의식하여 ‘보여주기식 사업’이나 ‘선심성 사업’ 등을 벌이는 경우가 많았다. 중앙정부는 지방단체장들이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함으로써 지방재정을 위태롭게 만들고 나아가서 중앙정부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려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저지른 일부 행태들이 중앙정부 관리들을 부정적으로 만드는데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자업자득이다.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세간에 회자되었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1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지난 2022년 강원도지사가 춘천에서 레고랜드의 개발을 맡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전임 지사가 레고랜드를 건설하면서 채권 형태로 돈을 빌렸는데 강원도의 빚이 늘어나면서 재정이 어려워지자 후임 지사는 그 빚을 사실상 못 갚겠다고 선언해 버린 것이다. 레고랜드 사업은 고조선 유물이 대량으로 발굴되고 있는 춘천 중도에 건설허가를 해준 것부터 문제였으며, 사업계약도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는 참담한 내용을 담고 있다. 만기 된 채권의 디폴트를 선언하여 채권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공기업이나 여타 지자체의 채권을 누가 믿고 사겠는가. 한 자치단체장의 방만한 재정운용과 또 다른 자치단체장의 무책임한 발언이 자칫 국가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지방정부의 채권은 정부의 채무이다. 중앙정부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야 가까스로 가라앉았다.

#2 인천광역시의 재정위기 사태

2010년대 초 인천광역시의 재정은 최악이었다. 당시 인천광역시는 2014년 기준으로 13조 1,685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40%를 넘어서 워크아웃(재무구조개선) 대상인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동안 인천은 무분별한 개발사업 수익에 심취되어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였다. 2014년 당시 인천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조성 비용 마련을 위해 2,272억 원의 채권을 추가로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자산매각 등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는 가속화되고 있었다. 다행히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되면서 각고의 노력을 통해 재정위기를 극복하게 된다.

#3 복지비 부담 놓고 중앙과 지방간 갈등

박근혜 정부 당시 중앙정부가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도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는 지방비 부담이 너무 과도하다며 중앙정부 지원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는 집단 성명서를 발표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러자 대통령은 지방정부 운영 실태가 너무 방만하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재정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사실상 중앙정부 예산 지원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자치단체장들이 무리한 공약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서 시급하게 필요한 분야의 예산이 부족한 만큼 중앙정부가 이를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용인 경전철 사업, 태백의 오투리조트 사업, 대구

도시철도, 부산의 대규모 도로사업, 인천의 은하레일 등 무리하게 추진한 자치단체들이 도마 위에 올려졌다. 중앙과 지방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지방재정운용이 방만하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이상에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재정자주권이 얼마나 신장했는지를 살펴보고,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 실태도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언급하였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지방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와 재정분권은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 방만성은 관리, 감독의 문제인 반면 재정분권은 자주성 확보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정분권만으로는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날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단순히 돈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지방소멸, 청년 인구 이탈, 지역균형발전 등의 문제들은 지금의 1987년 제정 헌법 체제하에서는 해결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어 보인다.

다행히 최근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7월 초에 국정기획위원회는 개헌을 국정과제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헌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지방자치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는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조직, 자주재정 등이 입체적으로 연결될 때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다. 그동안 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 제기해 왔던 내용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사회와 소상공인에게 주어진 또다른 길

김수민 샌프란시스코 도시 연구소 연구원

Local Creator

대한민국 곳곳에서 소상공인과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와 더불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 수도권으로의 청년층 집중, 고령화와 산업구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많은 지역이 활력을 잃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대형 프랜차이즈와 온라인 플랫폼에 밀려 설 자리를 잃고, 지역의 특산품과

문화는 점차 소비자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이러한 흐름을 되돌리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수많은 지원 정책을 쏟아냈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낮았다. 획일적 지원과 단발성 사업으로는 지속 가능한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해법 중 하나가 바로 로컬 크리에이터다.

로컬 크리에이터란 용어는 특정 지역이나 지역 사회, 그 지역사회의 사회, 문화, 경제, 환경과 관련된 정서적 속성을 내포하는 ‘로컬’과 창조적 활동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크리에이터’가 결합한 말이다. 한마디로, 로컬 크리에이터는 특정 지역의 자원, 전통, 문화, 이야기를 기반으로 독창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창작자이자 사업가들

말한다. 특히 근래 들어 단순히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에 잠재된 자산을 발굴하고 이를 현대적 감각과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전통 공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 상품, 빈 건물을 활용한 문화·예술 복합공간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활동은 단순한 개인의 창작을 넘어 소상공인의 성장,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문화 보존이라는 다층적 효과를 만들어 낸다. 해당 지역에 대한 애착에 자신만의 색깔과 특색을 담아 '지역다움'과 '자기다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로컬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은 국내에서 점차 커지고 있다. 전주 한옥마을의 도예가들은 조선 시대 전통 도자기 기법에 현대적 색감과 디자인을 입혀 관광객과 글로벌 시장을 사로잡았다. 제주도의 청정 자연에서 얻은 자원을 활용한 화장품 브랜드들은 친환경·지속가능한 이미지를 내세워 세계적 브랜드로 성장하며,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했다. 강원도의 로컬푸드 브랜드들은 감자, 옥수수, 메밀 같은 특산물을 가공하여 건강지향적 상품으로 재탄생시키며 농촌 소득을 높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한 상품 개발을 넘어 지역 문화와 이야기를 제품에 담아내고, 소비자에게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다시 지역으로 수익을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 로컬 크리에이터의 성공 사례는 해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마을 만들기(町づくり)' 운동이 대표적이다. 인구 감소와 산업 쇠퇴로 황폐해진 시골 마을에서 젊은 창업가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상품과 공간을 기획하여 마을을 재생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니가타현에서는 폐교를 개조해 공방과 카페, 숙소를 결합한 복합공간을 운영하면서 지역 장인의 기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전통 농업 방식과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유기농 농산물이 지역 안팎에서 인기를 끌며, 방문객과 체류 인구를 늘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팜 투 테이블(Farm to Table)' 운동이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는 주요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농장과 식당,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중간 유통 단계를 줄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품질과 가치를 공유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 농장의 소득이 늘어나고, 지역 식당들은 신선한 재료와 스토리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메뉴를 선보이며 경쟁력을 키운다. 유럽에서도 로컬 크리에이터의 움직임은 활발하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소규모 디자이너들은 지역에서 생산된 천과 기법을 활용해 패스트 패션과는 다른 독창적 패션을 선보인다. 지역의 전통 직물, 염색법, 봉제 기술을 현대 디자인과 결합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이런 상품을 통해 '지역을 담은 가치'를 소비하게 된다.

이처럼 국내외 사례가 보여주는 공통점은 로컬 크리에이터가 소상공인과 지역사회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 넣는다는 것이다. 지역 기반 창작자들은 단순한 경제적 효과를 넘어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외부인에게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며, 내부 구성원에게는 자부심을 심어준다. 특히 지역 성과 창업 역량이 뛰어난 로컬 크리에이터일수록 매출과 방문객 수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지역 이미지를 매개로 한 부가가치가 커졌다. 또한 이들의 성공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맞춤형 지원, 중간 지원 조직의 체계적 역할, 지역 주민의 수용성 등이 중요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하지만 로컬 크리에이터의 활동이 저절로 지역을 살리는 것은 아니다. 창작과 사업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원 체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단기적 보조금이나 행사성 지원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창업 교육, 자금 조달, 마케팅 컨설팅, 유통 채널 개척 같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인프라가 요구된다.

이에 로컬 크리에이터와 행정, 투자자를 잇는 플랫폼이 필요하며, 로컬 크리에이터가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소상공인과 지역사회 모두가 살아난다.

로컬 크리에이터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유행을 좇는 것이 아니다. 글로벌화와 디지털화로 세상이 획일화될수록 사람들은 개성과 의미가 담긴 상품을 찾는다.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주체가 바로 지역 자원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로컬 크리에이터다. 그들이 만든 상품과 서비스는 지역의 얼굴이 되고, 소비자는 그 안에서 특별함을 발견하며 기꺼이

가치를 지불한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은 생존을 넘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게 되고, 지역사회는 경제·문화적 활력을 되찾는다. 지금의 위기는 한편으로는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기도 하다.

사라져가던 골목의 작은 가게, 잊혀가던 전통 공예, 방치된 건물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단순히 창작자가 아니라 지역의 기회를 발견하고 이를 현실로 구현하는 전략가이자 연결자다. 정부와 지방, 민간이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연대할 때, 소상공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살아나는 미래가 열린다.



참고문헌

• 박창용, 2025,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로컬크리에이터에 관한 연구: 지역성과 역량을 중심으로」

홍콩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 정체성을 쌓아가다

글·석자는 문화도시 조성, 유희공간 문화재생 전략 선임 연구원



인천공항에서 홍콩은 편도 4시간으로 퇴근 후 바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이 가능할 정도로 가까운 곳이다. 그렇게 도착하여 공항이 소재한 신계를 지나 관광지가 밀집된 구룡반도나 홍콩섬으로 넘어오면 중화권의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다. 지도를 보면 한자보다 센트럴(central), 케네디로드(kenedy road) 등 영어로 표기된 행정구역을 흔하게 볼 수 있다. 구룡반도와 홍콩섬을 가로지르는 운하 역시 빅토리아 하버(Victoria Harbour)로 불린다. 차찬탕은 차와 식사가 가능한 홍콩의 대표적인 레스토랑이자 아침 식사를 의미하고, 마카로니 수프, 파인애플 번, 밀크티를 고기국수나 덮밥, 간단한 딤섬과 함께 메뉴로 판매한다.

아편전쟁으로 탄생한 제국의 식민지

홍콩이 언어, 건축, 문화, 도시 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영국의 색채를 강렬하게 드러내는 건 홍콩을 만든 게 영국이기 때문이다. 아편 밀수출을 차단하려는 청나라와의 갈등이 본격화하면서 영국은 광저우에서 쫓겨났고 작은 돌섬을 강제 점령했다. 이것이 홍콩섬이다. 1840년 아편전쟁이 발발하고 2년 뒤인 1842년 영국이 승리하면서 난징조약이 조인되었고, 홍콩섬은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어 영국은 1860년 구룡 반도를 차지했고, 1898년 신계 지역을 99년간 조차하면서 영국령 홍콩을 완성했다. 영국은 도시를 계속 확장했다. 이때는 홍콩이라는 이름도 없던 시절이라 이 도시를 퀸스타운(Queen's town)이라고 불렀다. 이후 규모가 확장되면서 빅토리아시가 되었고, 1857년 도시가 더 커지자 빅토리아시를 네 개의 구로 나누었다. 오늘날 센트럴은 중환(中環)이라 표기하고 성완은 상환(上環)이라고 쓰는데, 지명에 환(環)자가 들어간 게 바로 1857년 일이다. 참고로 당시 싸이완西環(서환)은 오늘날의 케네디타운(kennedy Town)과 싸이잉푼(Sai ying pun) 지역이고 하완(下環)은 오늘날의 완차이(Wan Chai)와 코즈베이웨이(Causeway Bay) 지역이다.¹⁾

1) 전명윤, (2021), 리멤버 홍콩 : 시간에 갇힌 도시와 사람들, 사계절.



머무르는 도시로 발전하는 홍콩

청나라의 멸망, 태평양 전쟁과 일본의 점령, 중화민국의 건국까지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혼란해지면서 홍콩에는 전쟁을 피해 도망친 난민, 정치적 입장이 다른 정치계 인사 등 이주민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1948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으로 이때 홍콩의 인구는 210만 명까지 증가했으며, 여기에는 자본가나 금융 전문가 등 재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 피난으로 재산은 줄었지만, 경험과 지식, 인맥은 보유하고 있었다. 제조 공장이 세워지고, 은행이 열리면서 금융업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했다. 오늘날 홍콩이 전 세계 경제와 금융의 중심이자 플랫폼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이런 자본가들이 있었다.

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중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이 폐기되고 떠나갈 때 영국은 홍콩을 포기하지 않았다. 중국은 이러한 영국의 태도를 맹비난했지만, 무력으로 다시 찾아올 여력이 없었다. 건국 초기 국정을 안정시키면서 서구와의 연락 창구로 영국령 홍콩을 묵인했다. 그렇게 홍콩은 서양 제국의 동아시아 진출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에서 거주와 개발 계획, 행정 체계가 필요한 하나의 도시가 되었다. 이주민들 역시 환란을 피해 잠시 머무르는 거처가 아닌 삶의 정착지로 홍콩을 바라보게 되었다.

초고밀도의 도시, 국가가 중심의 주택공급 계획

1949년 문화대혁명 이후 수천 명의 난민이 홍콩으로 이주하면서 홍콩의 인구 과밀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그러나 인구가 늘어난다고 외곽을 확대하거나 이주계획을 세울 수도 없었다. 지리적 특성상 산이 많고, 군사 시설이 있어 도심 내 거주할 수 있는 구획은 한정되어 있었다. 사실상 1950년

대 말까지 홍콩은 주거, 보건, 교육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이민자들은 불안정하게 살아갔다. 1953년 크리스마스 쉼메이(Shek Kip Mei)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5만 명이 피해를 보면서 당시 지지부진했던 주택공급 정책은 빠른 속도로 추진되었다.

1955년 최초의 공공주택이 완공되었다(29개 동, 1동 7층). 초기 단계에서는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편안함이나 미적인 측면을 최우선 순위로 두지 않았다. 오히려 우선시한 것은 공중보건과 안전 문제 해결이었다.²⁾ 두 개의 거주동이 부엌과 화장실이 있는 중앙동과 'H'자 형태로 연결된 구조였다. 성인 5명으로 구성된 가구당 면적이 9.3㎡에 불과했고, 1개동에 사는 전체 주민이 수도 2개와 화장실 6개를 공유했다.³⁾ 수직 도시 홍콩의 초고밀도 개발의 신호탄과 같았다.

1972년 홍콩은 주택공급 10년 계획을 발표했다. 시민을 위한 저가주택 공급이 사회 안정망을 확보해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게 취지였다. 새로운 주택청이 설립되었고, 선진적인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했다. 홍콩의 주택 유형은 크게 공공임대 주택, 보조 분양 아파트 그리고 민간 주택 세 가지로 구분된다. 민간 주택이 가장 흔하지만, 공공주택의 총수는 민간 주택 시장 전체의 수와 유사하다. 주택청에서 판매하는 공공 임대 주택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양 아파트로 분류되며 저소득층에게 주택 소유의 기회를 제공한다.⁴⁾ 세계에서 가장 부동산이 비싼 도시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삶의 터를 꾸리고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다.

2) Pi, J. (2019, March 30). Public Housing in Hong Kong: The challenge of housing the world's most populated region. Urban Review. Retrieved July 13, 2025, from Harvard Urban Review website

3) Cheung, E. and Chan, A. P. C., 2012, Revitalising historic buildings through partnership scheme: a case study of the Mei Ho House in Hong Kong, Property Management, 30(2), 176-189.

4) Pi, J. (2019, March 30). Public Housing in Hong Kong: The challenge of housing the world's most populated region. Urban Review. Retrieved July 13, 2025, from Harvard Urban Review website



일국양제(一國兩制),⁵⁾ 혼란 속에서 정립되는 홍콩인의 정체성

1997년 홍콩이 다시 중국으로 반환되었다. 불평등 조약으로 인한 식민지화, 신계 지역의 99년 조차 등은 이미 예정된 일이었지만 홍콩 내부는 여러 감정이 격돌했다. 1997년까지 홍콩인들은 영국부속영토 시민(BDTC) 자격을 받았다. 사실상 영국인도, 중국인도 아니었다. 중국은 50년간 일국양제를 약속하며 입법·행정·사법의 독립과 언론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많은 홍콩인은 1984년 중영 공동 선언이 발표되면서 국적 포기나 다른 나라로 이주를 선택했다. 식민시대를 겪었던 한국인 입장에서는 다소 낯선 상황일 수 있다. 그렇다고 홍콩인들이 식민시대를

미화하며 강렬한 향수를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륙의 역사와 정치체제, 경제 방식과는 다르게 자본주의라는 경제 구조, 자유주의적 체제 등 극한의 대비 속에서 1970년대-1980년대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대중문화 발달로 중국인(대륙인)과 홍콩인의 정체성 분리는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중요한 점은 홍콩의 정체성이 민족이나 에스닉 정체성과 달리 '장소 기반적' 정체성이라는 점이다. 홍콩에서는 더 이상 민족이나 족군(族群, ethnic group) 등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반면, 국제적이고 현대적인 대도시로 상징되는 홍콩의 도시적 생활방식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도시성' 그 자체가 새로운 홍콩의 정체성을 담은 핵심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⁶⁾

5) 일국양제는 중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안에서 두 가지 정치체제가 조건부로 공존하는 정치제도를 의미한다.

6) 장정아, 2008, "우리의 기억, 우리의 도시: 집단기억과 홍콩 정체성," 동북아 문화연구, 17, 87-115.

과거를 보존하는 방식:

메이호 하우스

1955년 건설된 29개 동의 공공주택 중 하나인 메이호 하우스는 2004년까지 운영되었다. 노후화로 철거되어야 하지만 초기 공공임대주택의 특징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써 1급 역사건축으로 지정되었다. 2007년 설립된 개발국은 메이호 하우스 보존 사업에 '파트너십을 통한 역사 건축의 재활성화 계획'을 도입했다. 이 계획은 정부 소유의 역사 건축물은 정부가 수복 비용을 부담하여 복원하고, 복원한 건물을 문화예술, 교육 등 사회적 기업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활용하는 방안이었다.⁷⁾ 문화유산과 개발 사이의 균형을 목표로 역사

유산의 일차원적 복원이 아닌, 보존과 동시에 리모델링을 통해 랜드마크로 조성 후 관광, 도시재생 등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도록 한 것이다. 메이호 하우스는 4년 여의 공사를 거쳐 2013년 복원되었으며, 홍콩유스호스텔연맹이 운영자로 선정되어 유스호스텔로 운영되고 있다. 메이호 하우스 인근 지역은 쪽방촌으로 공공임대주택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산다. 현재의 가난과 분리된 노스텔지어 상품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2016년 메이호 하우스는 홍콩 사회 역사에서 중요한 장을 보존하며 공공주택의 현대적 유형이 지속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이유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보존상을 받았다.



7) 한지은, (2018). 우리의 도시를 기억할 권리: 홍콩의 도시 문화유산 보존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1(2), 45-61.



식민의 아픔을 예술로 치유한 재생 공간: 타이윈

식민시대 영국은 홍콩 센트럴에 중앙경찰서, 중앙 법원, 빅토리아 교도소를 밀집시켜 원스톱 사법 시스템을 구축했다. 초기에는 해적이나 강력범죄자 등을 수용하였으나 식민지 시기에는 혁명가나 중국 공산당원, 노동운동가 등 정치적 이견이 있는 사람들을 탄압하기도 했으며 이후 난민이나 불법 체류자들과 그 가족까지 억류했던 곳으로 홍콩의 아픈 역사가 서린 곳이기도 하다. 1995년 문화재로 지정된 후 홍콩 정부의 주도로 2008년 역사적 건물 재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2018년 문화복합 공간으로 개장했다.⁸⁾ 보전을 위한 비용 부담은 홍콩 정부가 했으며 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관인 홍콩자키클럽이 운영 주체로 나섰다. 빅토리아 교도소는 감옥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장소 아카

이브, 전시, 펍,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앙 광장에서는 다양한 연극과 공연, 영화, 퍼포먼스 등 문화예술 행사가 이어진다. 친친테오 타이윈 총괄 디렉터는 타이윈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단순히 역사를 보존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흥미로운 일들을 계속 일으키면서 자연스럽게 옛 홍콩과 연결하는 것, 집단이 공유하는 기억을 함께 탐구하는 것이 타이윈의 역할이자 동시에 현대의 홍콩이 향유하는 문화입니다.”⁹⁾

홍콩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랜드마크: k11 Musea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19의 위기에서 벗어나 국제 비행기가 다시 이륙할 때 홍콩에서 가장 주목

받은 곳은 k11 뮤지아(MUSEA)였다. 구룡반도 침사추이 빅토리아 도크사이드(Victoria Dokside)는 과거 산업·항만 기능의 중심지였으나 시대 변화와 노후화로 쇠퇴하면서 낙후 지역이 되었다. 홍콩의 부동산 개발회사 뉴월드 그룹은 10년간 25억 달러를 투자해 예술과 상업을 결합한 새로운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뉴월드 그룹의 부회장인 에이드리언 첩은 이 사업에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며 건축가, 예술가, 디자이너 등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신의 핵심 인물 100여 명을 끌어들였다.¹⁰⁾ 건물 자체가 미술관이자 하나의 작품으로 외관은 이국적인 정취를 느끼지만, 내부로 들어온 순간 소우주를 떠올리게 하는 오페라 시어터를 만날 수 있다. 그 중앙에는 K11 뮤지아의 심장이자 발원지인 골든 불이 있다. K11 뮤지아는 단순한 쇼핑몰도, 복합문화공간도 미술관도 아니다. 도시와 도시 재생, 문화예술과 관광의 창의적인 아젠다를 전달하면서 홍콩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벅찬 기대감을 보여준다.

잠시 스쳐 가다 이내 머무르는 도시, 홍콩

장소는 대지나 인공적인 건물, 자연 경관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곳에 서서 바라보는 인간이 물리적 환경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기억을 쌓은 후에야 비로소 장소가 될 수 있다. 홍콩의 역사가 그러하다. 전쟁의 씨앗이었다가 교류를 위한 교두보가 되었다. 누군가의 피난처였다가 삶의 터가 되었다. 세계의 정세와 체제의 충돌지이기도 했다. 사회주의 국가 중국이 품은 세계 자본이 집결한 도시이다. 그 많은 정체성이 섞이면서 도시는 고유함을 세운다. 국가가 주거를 책임지는 공공임대 정책을 추진하고, 식민시대의 아픔을 보전하며 치유하는 문화복합공간을 조성했다. 과거 빠른 속도로 성장한 도시의 밑바탕을 다시 들여다보며, 재생의 방향에서 새로운 도시 체제를 제안한다. 홍콩과 홍콩인의 정체성은 혼란을 기저에 동반한다. 그러나 그 이질감이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던 동력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홍콩

Hong Kong



1842년, 아편전쟁 승리한 영국, 난징조약으로 홍콩섬 식민지화

1898년 신계 지역 99년 조차, 영국령 홍콩 완성

초기, 퀸스타운에서 빅토리아시로 확장



동북아시아 각국에서 난민, 정치계 인사, 금융 전문가 등 이주, 인구 210만 명까지 증가

정체성의 혼란과 고속 성장의 흔적 등이 혼재된 현재의 홍콩

1997년 중국 반환, 국적 포기 및 해외 이주 홍콩인 급증

1972년 주택공급 10년 계획



1955년 최초 공공주택 완공

1949년 문화대혁명으로 난민 이주, 홍콩 인구 과밀화 문제 발생

8) ESG코리아뉴스 (2024, 3월 28일). [ESG탐방] 홍콩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1881 헤리티지, 센트럴 마켓, 타이윈, PMQ. ESG코리아뉴스

9) 류진. (2024, 7월 1일). 홍콩을 홍콩답게 만드는 공간과 사람. Hey! Travel.

10) W Korea. (2023, April 26). 홍콩에 가면 들려야 할 예술적 랜드마크 K11 MUSEA. W Korea.



서울 남산공원 백범광장에 위치한 백범 김구 동상
(1969년 백범 김구 선생 기념사업협회에서 그의 의로움을 본받으려는 뜻에서 세웠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백범 김구

서울 남산공원 여섯 위인 연재
첫번째 이야기

글·조수빈 재정정보분석센터 청년인턴

* 서울 남산공원의 여섯위인 섹션은
청년인턴과 함께합니다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에 나오는 이 구절은 힘과 정복이 아닌, 문화와 품격으로 존중받는 나라를 꿈꿨던 그의 이상을 가장 잘 보여준다. '오징어 게임',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세계인들이 K-문화에 열광하는 지금의 현상을 볼 때, 김구 선생이 말하는 문화의 힘이 얼마나 큰지 실감이 된다. 문화의 힘을 강조한 선생의 혜안은 조국의 자주를 위해 한 생을 바친 그의 일생에서 찾을 수 있다.

* 위인을 기리는 한 마디, 서울 남산공원에 기억의 꽃이 피어 납니다. 백범 김구를 비롯한 남산공원 위인 6인에 대한 당신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김구 선생은 민족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일제강점기에서 독립의 최전선에 섰다. 선생이 1905년 을사늑약에 반대해 민중 시위를 조직한 것은, 외세의 강압보다 민중의 자각이 먼저라는 판단에서였다. 이후 1911년 안악사건 당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4년 8개월간 옥고를 치른 것은 그의 행동이 단지 저항이 아니라 자주적 정의의 실천이었음을 후손들에게 몸소 보여준 것이었다. 또한 선생은 출감 후 민족 전체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교육과 계몽 활동에 나섰다. 3·1운동을 계기로 중국 상해로 건너가 임시정부를 이끌었고, 국가의 형식뿐만 아니라 민족의 정통성을 지키는 일에 집중했다. 임시 정부는 국내외 독립운동 단체와 연대하여 자금조달, 독립신문 간행, 독립운동 방향 제시 등 구심적 역할을 하였으며, 그 중심에는 김구 선생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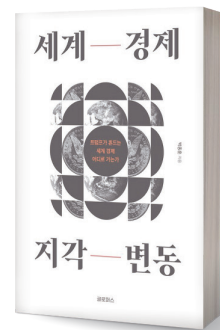
1940년, 그는 독립은 선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한국광복군을 조직하여 실전 가능한 무장세력을 통해 민족 스스로 조국을 되찾을 준비가 되어있음을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해방 이후에도 그는 독립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하나 된 한반도를 위해 노력하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탁통치 결정이 내려졌을 때 즉각 반탁운동을 주도하였다. 아쉽게도 냉전 체제 속에서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민족 내부의 자율성과 자주적 국가 수립을 주장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단지 경제력이나 기술력만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다. 독립을 향한 김구 선생의 강한 신념과 끊임없는 노력,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고자 했던 점은 후손인 우리가 본받아야 할 덕목이다. 김구와 같은 큰 스승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한민국 제34회 임시의정원 의원 일동(1942.10. 촬영, 동아일보사)
하단 정가운데 김구 선생이 앉아있다.

격변의 시대에 살아남기



「세계 경제 지각 변동」

박종훈 지음 | 글로퍼스

이 책은?

세계의 정세가 내 삶에 미치는 영향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제 생존 가이드

트럼프 정부 2기가 시작되고 미국이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보호무역과 관세 장벽이 새롭게 대두되었다. 이렇게 기존의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재편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은 무엇일까. 앞으로 다가올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금융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성장을 위한 대안을 국제 정세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계속 달라지고 있는 세계 정책의 의도를 파악하여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며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와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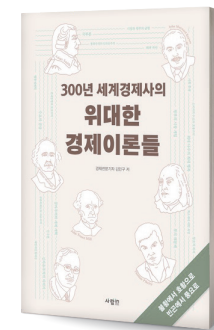
이 책의 핵심 보감 寶鑑

지금 알아야 할 거대한 경제 지형 변화

- 세계화의 종언:
글로벌 경제 통합의 끝과 새로운 블록화 시대의 도래
- 금리와 인플레이션의 이중고:
경제 성장의 숨통을 조이는 전방위적 압력
- 미·중 패권 경쟁:
반도체, AI,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 벌어지는 기술 전쟁
- 한국의 기회와 함정:
미국과 중국 사이의 협력과 갈등, 그리고 생존 전략

그 어느 때보다 변화가 휘몰아치는 시대다.

정치, 사회, 경제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의 흐름을 짚어내고 이겨낼 힘을 길러야 한다.



「300년 세계경제사의 위대한 경제이론들」

김민구 지음 | 사람in

이 책은?

밀도 높은 20가지 경제 이론으로
근현대 경제 현상을 들여다본다

자본주의 세상을 사는 오늘날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하나를 꼽자면 바로 기본적인 경제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수많은 경제이론을 일반인이 한눈에 보기엔 쉽지 않은 법. 저자는 18세기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부터 21세기에 큰 영향을 미친 경제학자들까지 그들의 이론과 시대상을 함께 엮어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소개한다. 이를 통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 상식부터 경제이론, 경제학사까지 쉽게 익혀 오늘의 경제 흐름을 보는데 좋은 양분이 된다.

이 책의 핵심 보감 寶鑑

경제이론의 변천사에서 만나는 몇 가지 역사적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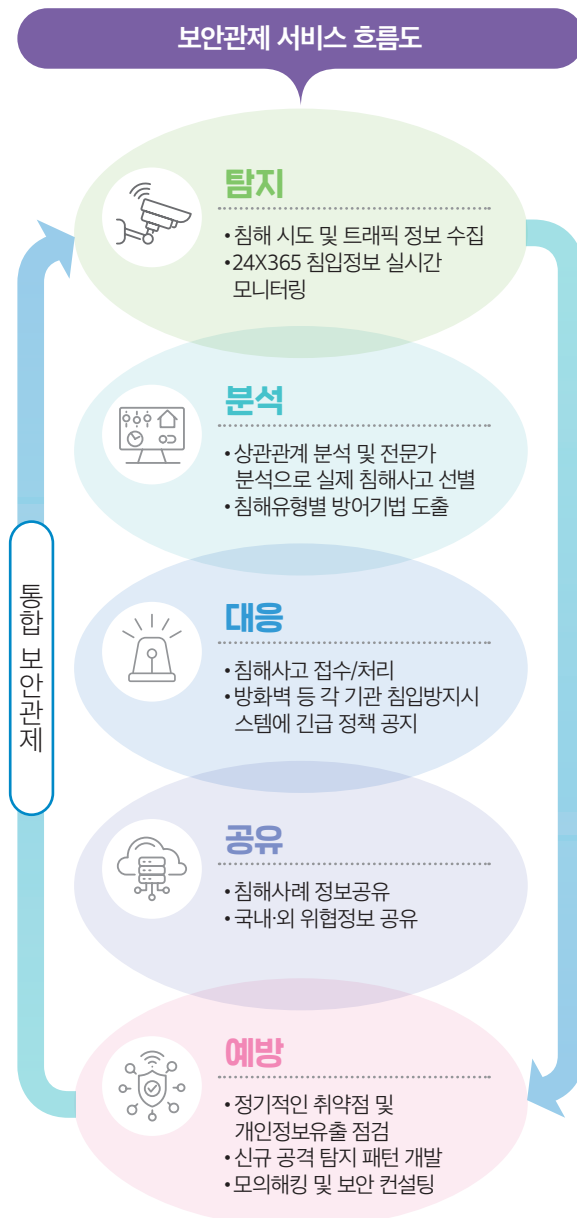
-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꾼 산업혁명과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 곡물법 파동과 데이비드 리카도의 금본위제도
- 산업혁명에서 공리주의까지, 제러미 벤담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 한계효용의 법칙, 앨프리드 마셜과 수요와 공급
- 독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 그리고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정부의 시장 개입

FIS 사이버 보안관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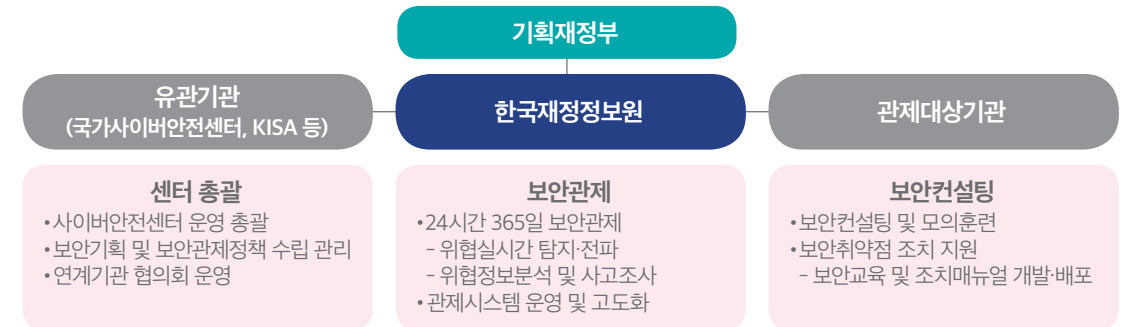
» 지능형 보안관제 운영

한국재정정보원은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기획재정부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안관제체계를 24시간 365일 운영합니다.



» 기획재정부 연계기관 협업

한국재정정보원은 연계기관과 최신 보안기술, 위협 정보·동향, 관련 교육 시행 및 주요 추진업무 공유와 '수요자 중심'의 기관별 맞춤형 보안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사이버위협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보안취약점 점검

한국재정정보원은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취약점 컨설팅을 수행하여 기획재정부 정보자산의 보안취약점 분석·평가를 통해 잠재된 정보보안 위협요소를 사전에 발굴·해소하고, 각종 사이버 침해에 대한 보안 예방체계 강화 및 기획재정부 정보자산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기대효과

한국재정정보원은 통합 보안관제센터와 긴밀한 협조 및 각 연계 기관들과 공동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3단계 국가 사이버 안전체계를 구축합니다.

- ① 다중 보안관제를 통하여 탐지 및 대응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 ② 해킹정보의 신속한 공유를 통하여 피해 확산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 ③ 사고 발생 후 사후 대응하는 기존 대응체계에서 예방 중심의 사전 대응체계로 사이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재정정보원은 사이버공격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주요 문제임을 인식하여 기획재정부 전체에 대한 실질적인 보안강화를 실현하고 보안문화를 전파해 나가겠습니다.

FIS NEWS



한국재정정보원, NH농협은행과 함께 일손부족 농가 찾아 농촌 일손돕기 실시

한국재정정보원(원장 윤석호, 이하 '재정원')은 자매결연 마을의 일손 부족을 돕기 위해 6월 26일 NH농협은행(은행장 강태영)과 협업하여 경기도 연천군 소재 새동지 마을을 찾아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실시했다. 재정원은 지난 2023년 11월 경기도 연천군 새동지마을과 자매결연 협약 체결 이후 매년 임직원들과 서울 중구지역 취약계층의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활동을 해오고 있었다. 이에 이번 농촌 일손돕기에서는 윤석호 원장과 NH농협은행 김일섭 공공금융부장 등 양 기관 임직원 26명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찾아 감자 및 오이 등의 수확 작업을 도왔다. 윤석호 원장은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자매결연 마을에 NH농협은행과 함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FIS NEWS



한국재정정보원, 노사가 함께하는 '고객만족경영' 선포

재정원은 개원 9주년을 맞아 6월 30일 고객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과 서비스 혁신 의지를 담은 '고객만족경영 선포식'을 노사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고객현장은 고객의 전자 정보 이용 편의성, 고객경험관리 등이 새롭게 강조되어 기존의 선언 중심 문구에서 벗어나 실행 가능한 고객 서비스 기준으로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윤석호 원장은 "고객 기대에 부응하는 자세야말로 신뢰받는 공공기관의 출발점"이라며, "전 직원이 고객 관점에서 행동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재정원은 이번 고객현장 개선을 계기로 고객 중심 혁신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다.

▲인공지능 음성 자동응답 체계 도입(7월),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원 재정 도움센터 개소(8월) 등 고객의 편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재정원은 개정된 고객현장을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을 지속 점검하고, 남산 지킴이 활동을 통해 지역 공헌 활동을 강화하며 고객 의견을 실시간 반영하는 체계로 전환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실현할 방침이다.



애독자 코너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 『나라재정』은
항상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찾아라~ 한국재정정보원 숨은 정보!



Quiz

정부의 회계기금 간, 정부 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 활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에 따라 정부의 모든 회계와 기금을 포괄하는 재정 개념은?

- ① 통합재정 ② 특별회계
- ③ 외평기금 ④ 금융성기금



우측 QR코드로
한국재정정보원 블로그에 접속해
정답을 찾아보세요



힌트



응모

좌측 QR코드로 접속해
정답을 응모해 주세요.
*응모기간 2025.7.25.~8.17.



» 지난호 정답 : 추가경정예산

» 지난호 퀴즈 당첨자 010-****-2008 010-****-3881 010-****-7526
 010-****-4151 010-****-4515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와 블로그, 월간 『나라재정』에
숨겨진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찾아 애독자 퀴즈 정답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사계과재서세대 세민로에세대

2025. 5. 14. 수 - 7. 27. 일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 II

Special Exhibition Hall II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국립민속박물관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산사태 국민행동요령

1. 일상 생활 중에

점검하고

집 근처 배수시설 등을
점검하고 위험요인 발견 시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
센터에 신고하세요



2. 산사태 발생 우려 시

대비하고

산사태정보시스템(PC),
'스마트산림재난' 앱(스마트폰)
또는 방송을 통해 산사태 예보
발령 정보를 확인하세요



3. 산사태 발생 시

대피하고

산사태 방향과 멀어지는
방향, 가장 안전한 높은
곳으로 대피하세요



4. 산사태 발생 후

신고하세요

매몰자나 부상자가 있을 경우
소방서(119)에 신고하세요



산사태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할 수는 있습니다

산사태국민행동요령 관련 자세한 정보는
산사태정보시스템, 국민재난안전포털
또는 스마트폰 '스마트산림재난' 앱에서 확인하세요.

